

1991년 열사 투쟁과 한국민주주의

30 1991년 열사투쟁
30주년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목 차

발제문

- 발제1 잊혀진 1991년, 잊게 한 권력 / 13P**
- 이종폭력과 파워엘리트의 변환, 그리고 권력을 창출하는 언론
정준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 발제2 87년 항쟁은 91년 5월에 끝났다 / 13P**
홍기빈 정치경제학자
- 발제3 1980~1990년대 도심시위와 경찰의 진압 양상 / 13P**
-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
이준영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토론문

- 토론1 5월 투쟁의 자식들과 좌절된 것들의 연대 / 13P**
손우정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2 91년과 대면하고 대화할 용기를 가지다 / 13P**
정완속 1991년 전대협5기 투쟁국 차장
- 토론3 87년 노동자 대투쟁부터 민주노총 출범까지 / 13P**
- 노동자 투쟁으로 이루어낸 민주노조 운동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토론4 파르마콘으로서 91년 열사투쟁 / 13P**
- 프롤레타리아화와 탈정립화
박성우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토론5 청소년운동 입장에서 본 1991년 / 13P**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잊혀진 1991년, 잊게 한 권력

이중폭력과 파워엘리트의 변환, 그리고 권력을 창출하는 언론¹⁾

정준희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

1. 1991년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타계한 소설가 박완서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뚜렷한 비극으로서 기억되는 6.25 전쟁에 관련된 자전적 연작 소설을 남겼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 이은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에서 박완서는 자신의 가족을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린 국가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불 속에서 외롭게 절망과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놈의 나라가 정녕 무서웠다. 그들이 치가 떨리게 무서운 건 강력한 독재 때문도 막강한 인민군대 때문도 아니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고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뻔 수가 있느냐 말이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만고의 진리에 대해. 시민들이 당면한 굶주림의 공포 앞에 양식 대신 예술을 들이대며 즐기기를 강요하는 그들이 어찌 무섭지 않으랴. 차라리 독을 들이뒀던들 그보다는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그건 적어도 인간임을 인정한 연후의 최악의 대접이었으니까. 살의도 인간끼리의 소통이다. 이걸 소통이 불가능한 세상이었다. 어찌자고 우리 식구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을까.”

-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1) 이 글은 2021년에 발간된 권경원의 책 <1991, 봄: 잃어버린 이름들을 새로 쓰다>의 일부로 기고한 필자의 원고를 이번 심포지엄 발표용으로 보완 및 재구성한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간의 실존을 철저히 망가뜨려 놓고도 당대의 국가는 ‘천연덕스럽게 시치미를’ 뺐다. 예술로 분칠한 선전선동을, 배꼽은 이들 앞에 밥 대신 내놓았다. 나는 6.25를 이렇게 경험하진 못했다. 하지만 전쟁을 직접 겪은 이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6.25를 기억하고 추념한다. 교과서와 역사책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통해,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또 내 인생 내내 수없이 반복되어왔던 국가적 의례를 통해 나는 6.25라는 기억 공동체의 일원이 된 셈이다. 그러나 나에게, 1991년 그 거리 위에서 땀과 콧물과 눈물 그리고 때론 피까지 범벅이 되며 싸웠던 이들에게, 또 그 시기를 경험하지 못한 후세대들에게 1991년은 그런 방식으로 기억되지 못한다. 우리가 체험했던 1991년이 정말 거기 있었기는 했던 걸까.

“1991년 5월에 희생된 젊은 죽음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희생과 헌신의 가치보다 미안함 혹은 죄책감 등의 전도된 가치로 대상화된 채 묵혀 오면서 그해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게 돌이키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1991년이 1987년 이후 지속됐던 민주화 열망의 좌초를 지켜보는 시간이었다는 점보다 치명적인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애도의 마음 길을 찾는 데에 실패한 애도 행렬 속 사람들이 당시 반복됐던 희생을 설명하지 못하는 곤경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 권경원 <1991, 봄: 잃어버린 이름들을 새로 쓰다>

1991년은 정확한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채, 잊혔거나 잊힘을 강요당했다. 아니 기억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고, 애써 기억해내려 노력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강경대와 같은 학번의 대학생으로, 그 누구보다도 1991년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데 헌신했던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 권경원은 기억하려는 자가 감당해야 할 ‘트라우마’와 설명하려는 자가 처한 ‘곤경’을 이야기한다. 스스로는 기억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건 죄책감뿐이어서 매년 기억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 그 흔한 ‘운동권 후일담’으로라도 팔아먹는 이조차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다가 왜 그런 희생이 그때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에 대해 적절히 설명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에 시달린다. 왜일까? 1991년이 1980년의 <택시운전사>가 되기 어렵고 영화 <1987>처럼 회자될 수 없는 건 어째서일까?

“1991년 5월은 87년 6월과 달랐다. 둘 다 뜨거웠으나, 둘 다 영예로운 경험으로 남은 건 아니다. 둘 다 민주화 투쟁으로 시작됐으나, 둘 다 ‘항쟁’의 이름을 얻은 건 아니다. 후자는 ‘민주화 원년’으로 기록됐으나, 전자는 상처와 오욕의 시대로 남았다. 후자는 일부 지도부에게 정치 권력을 안겨 주며 거듭 호명되고 있으나, 전자는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과거로 잊히고 있다.”

- 김연수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맞다. 1987년은 헌법을 바꿨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찾아온 최초의 시민 민주주의로서 누구나 ‘87년 체제’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 직전의 부마항쟁도 체제를 바꾸지는 못했다. 물론 1979년 부마항쟁은 유신체제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끔찍하게 학살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를 종식시킨 건 김재규의 총구였으며, 1980년 광주의 짓밟힌 꿈은 1987년 시민항쟁과 그 결실로서의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야 부분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일컬어 ‘91년 체제’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991년의 그 처절한 희생이 한국 민주주의의 진로를 바꾸는 게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1991년이 그렇게 기억되거나 평가받지 못하는 건, 3당합당을 통해 이뤄진 김영삼 정부의 탄생을 한국 민주주의의 주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저간의 사정, 1991년 항쟁의 지도부가 설정했던 목표의 불명료함, 나아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1991년의 희생을 ‘자기 파괴이자 패륜적 맹동’으로 오염시켰던 당대 권력의 강력한 이미지 공작이 상호 조합된 불행과 비극 때문이었다고 판단한다.

2. 이중폭력을 통한 파워엘리트의 전환

1991년은 폭력의 교차로였다. 우리가 체험한 1991년을 다시 소환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두 축으로 전개된 각각 두 종류씩의 폭력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국가 폭력과 민간 폭력을 한 축으로 하고 물리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을 다른 축으로 하는 폭력의 위상학인 셈이다. 1987년 이전까지 폭력은 주로 국가가 가하는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재현되었다. 하지만 1990년에 노태우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이른바 ‘조폭’이라는 민간 폭력 역시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1991년을 기해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춘 상징 폭력이 상당히 주효한 통치 수단으로 부상하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1980년 광주의 끔찍한 상흔을 안고 있던 민주화 운동 세력은 언제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폭력적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의 전투적 노동운동 경험을 통해, 파업 현장에서 그리고 시위 현장에서, 조직된 대오의 ‘의사 표현 공간 및 시간’을 확보하고, 최악의 순간에도 지도부를 옹위하여 피신시킬 수 있게 할 만큼의 물리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실용적으로 유효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자위적 폭력을 마치 국가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압도할 정도로 성장한 민간 폭력인 것처럼 문제화(problematize)했다.

1989년 동의대학교 사건에서 나타나듯, 전방위 압박과 강경 진압을 통해 더 강력해 '보이는' 저항을 자극했으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극적 결말의 책임을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들씌웠다.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노태우의 1990년 '10.13 특별선언'이었다.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으로 재현되고 또 그렇게 기억되어온 이 사건은 조직폭력배를 소탕하여 치안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노태우는 "국가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이를 소탕해나갈 것"이라면서 이른바 '물태우'라고 불렸던 자신의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새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강인한 이미지로 바꿔내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이 칼끝은 조폭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퇴치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반민주적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 세력의 자위적 폭력에 대해서도 '민주사회'의 이름으로 철퇴를 내릴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셈이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직선제 헌법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폭력적 국가장치인 국군보안사령부를 통해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을 행해왔음을 윤석양 이병이 폭로했던 10월 4일로부터 불과 열흘도 안 된 시점에 행해졌다.

여전히 압도적이었고 여전히 문제의 중심이었던 국가 폭력의 문제를 시야로부터 멀어지게 한 채, 민간 폭력의 위험성을 부각시켜 그것을 '일소하는' 국가 폭력이 마치 정당한 민주적 국가의 작동 방식인 것처럼 본말전도 시키는 데에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 폭력이 동원되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이고, 1991년은 그러한 이중폭력의 산물이었다. 1991년과 언론을 연결시켜 바라보는 것은 다소 생소한 시각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1991년을 경험한 이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리고 1991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그 시기를 되짚어볼 때 가장 뚜렷하게 표상되는 이미지는 백골단, 쇠파이프, 분신, 계란과 밀가루 등이다. 당대 신문과 방송이 전달했던 지배적인 '이미지 연쇄'를 매개로 1991년을 기억하거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당대의 이미지 연쇄를 꿰어주던 지배적 인식과 해석의 틀^{frame}은 바로 '어둠의 세력'이다. 백골단과 쇠파이프로 상징되는 '무자비한 국가 폭력'의 문제가 어느 순간 불순한 집단에 의해서 '설계된 패륜적 (자기) 폭력'의 문제로 뒤바뀌어 버린 것. 그로써 처절한 저항적 행위였던 분신은 철없는 자기 파괴를 넘어 도구화된 죽음으로, 그리고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항의는 스승마저도 무자비하게 잡도리하는 무절제한 맹동으로 전치^{轉置}되었다. 그 중심에 1991년의 언론이 있었다. 이들 언론은 더 이상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언론, 즉 독재 권력 주변에서 잔반을 얻어먹던 애완견^{lapdog} 언론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에 의존해야 했던 '민주화 이후의 정치권력'을 낙점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지니게 된 언론이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상징권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언론이었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1987년을 전후로 우리 사회의 파워엘리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후 처음 치러진 198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력은 다시금 노태우가 주도하는 군부와 우파 정치연합이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구성한 파워엘리트는 전에 비해 취약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군대, 경찰, 검찰, 정보기관 등의 폭력적 국가기구에 대한 장악력은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파워엘리트 내부의 권력블록^{power bloc}이 전보다 훨씬 복잡하게 분화되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일원적 통치체제를 갖추기에는 노태우를 정점으로 하는 핵심 파워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과 헤게모니적 포괄력이 충분치 못했다. 무엇보다도, 파워엘리트의 주변부에서 중심부의 위치로 새로 부상한 의회권력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 지역에 거점을 둔 이른바 삼김^{三金}세력에 의해 분점되었다. 특히 1987년 대선 직후에 치러진 1988년 총선 결과로 우리 헌정사에서 사실상 최초로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는 더 이상 전처럼 단순한 형태의 파워엘리트 구성과 작동이 불가능해졌음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게다가 과거에는 파워엘리트의 종속적 구성요소에 불과했던 재벌이 정치권력에 의한 직접 통제를 상당 부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거대 경제 권력으로 성장했다. 형식적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의 사법권력 역시 (여전히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폭력적 파워엘리트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긴 했지만 이들 사이로 드문드문 비치는 권력공백을 파고들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독자적 권력블록으로서의 '지분'을 점점 강화해가는 양상이 펼쳐졌다.

1991년의 5월 정국을 촉발시킨 핵심요소는 비제도권 민주화 세력을 대상으로 집중 타격을 도모하면서 노태우 정부가 주도했던 공안정국이다. 1987년 체제는 기존에는 사실상 '재야' 세력으로 배제되어 있던 김대중과 김영삼 등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 여전히 재야에 남아 있던 이른바 '운동권'은 1987년 체제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통일과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더 심층적인 민주주의를 밀어붙이고자 했다. 이런 조건에 처한 노태우 정부가 '5공 청산' 선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제도권으로 들어간 민주화 세력이 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비제도권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는 친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여 민주주의 체제 바깥으로 도려내고자 조직적 반격을 기획한 게 바로 공안정국이다.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국가장치가 국가보안법과 함께 1989년에 제정된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이었다. 법률 전체가 처벌규정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형법이라고 할 만큼 그 의도와 목표물이 명확했던 이 법률은 1989년 내내 수많은 학생 활동가들을 잡아들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1990년 1월 22일에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전격적인 '3당합당'을 선언하고 속칭 '보수대연합'을 결성한 것은 전에 비해 구성이 복잡해진 한국 파워엘리트의 정치적 외연을 보여주는 매우 특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을 호남 지역으로 한정시켜 정치 권력으로서의 진출 가능성

을 차단하는 한편, 기타의 진보정당과 재야 운동권은 종래의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맹동적 친북좌파'로서 고립시켜 타격, 소멸토록 하는 게 목적이었다.

이로써, 1988년의 여소야대 구도가 위축된 권위주의 세력과 확장된 민주주의 세력으로 재현된 제도권 정치를 의미했다면, 1990년의 제도권 정치는 '자유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내건 거대 여당(민주자유당)과 맹동적 친북좌파와의 기존 연결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소규모 호남 정당(평화민주당)의 구도로 별안간 재편된 셈이다. 이는 기존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결정적으로 오염시킨 꽤나 성공적인 정치 프로젝트로서 기록될 만했으나, 파워엘리트 구성의 외연 확장과 복잡화에 따른 내부적 고민을 증대시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권력 재창출 구도의 불안정성·불예측성이 급속히 커짐으로써 수시로 공백이 발생했고, 파워엘리트 내부의 이익을 조율하는 한편 대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 경쟁의 중요성이 커졌다. 바로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한국의 주류 언론이다. 이들은 3당합당으로 탄생한 새로운 파워엘리트 지배체제를 거부하는 잔류 야당과 재야세력의 저항을 (주로는 지역감정과 레드 콤플렉스를 동원하여) 제압하거나 분산시키는 한편, 핵심 파워엘리트 내부에서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권을 쥌 수 있도록 목적의식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자처했다.

1991년의 5월정국은 주류 언론의 그런 상징 권력(이자 상징 폭력)이 실로 빛을 발한 시기였다. 나는 그것이 김지하의 '죽음의 굿판', 박홍의 '어둠의 세력', 정원식의 '스승을 폭행하는 제자'의 이미지 연쇄로서 완성되었다고 본다. 이런 이미지 연쇄는 5월 초부터 6월 초에 이르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형성됐다. 그 시발점은 조선일보가 5월 5일에 게재한 김지하의 기고문이다. 저항시인에서 생명사상가로 '전향'한 그가 "젊은 벗들"에게 "죽음을 이용"하지 말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것에서 폭력의 이미지는 국가로부터 운동권에게로 신속히 전가됐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8일에는 서강대 박홍 총장이 교내 메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우리 사회에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서 "살아있는 우리들이 이들의 실상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²⁾ 이 회견은 신문과 방송의 거의 모든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고, 김지하가 언급한 어리석은 젊은 벗들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선동당한 생명경시 세력이 됐다. 김지하와 박홍은 한 때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당사자이거나 그런 학생들을 보호했던 '어른'으로서의 상징권력을 지니고 있었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탄압을 방조했던 주류 언론들이 그것을 심분 활용했다.

2) 박홍은 1991년 5월 24일에 게재된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어둠의 세력」은 실존단체 아닌 죽음 선동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칭한 것이라며 부분적으로 해명했지만, 그가 말한 대로 "실상"을 파헤치는 매카시적 국가 개입이 곧바로 후속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다. 게다가 그는 1994년 8월을 전후로는 아예 수만 명 단위의 "주사파 암약설"을 적극적으로 주창하면서 자신의 매카시즘을 곳곳에 전파하는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

김지하와 박홍의 상징 권력 및 폭력에 힘을 실어주고 날개를 달아준 주류 언론이 그 다음 단계의 상징 조작에 힘을 쏟은 건 수사학적으로 지칭된 '어둠의 세력'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일이었다. 박홍 총장의 어둠의 세력론은 기자회견이 있던 날 새벽에 발생했던 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씨의 분신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다. 5월 9일 경찰은 서강대생 7명을 소환 조사했고, 곧바로 분신 배후설이 중앙일보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으며, 이후 정국은 '백골단에 의한 강경대 타살'과 그에 저항하는 '분신' 국면에서 유서 대필 혐의 등을 포함한 '분신방조자 색출' 국면으로 전변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6월 3일 외대에서 발생한 정원식 총리 폭행 사건이었다. 노태우 정부가 시국 수습 방안으로 (공안정국을 이끈 강경 이미지의) 노재봉 총리를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주장된) 정원식 전 문교부장관을 총리로 지명한 것이 5월 24일이었다. 그리고 취임을 앞둔 6월 3일, 외대에 마지막 강의를 하러 갔던 스승은 몰지각한 학생 운동권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하며 여기저기 끌려 다녔다. 이것이 당시 언론이 성공적으로 창출해낸 민간 폭력의 패륜적 이미지이다.

그는 문교부장관 재임 시절 전교조 해직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서 장관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그와 유사한 형태의 격렬한 항의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총리로서 지명되었을 때에는 대통령 특사로서 한 달 간 아프리카 순방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다. 그런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강의에 충실하지도 않았을) 그가 외대 교육대학원 강사로서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만큼 고도로 계산된 이미지 연출 전략의 혐의를 짊어 남긴다. 그는 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까? 총리 경호 인력조차 딱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그 수많은 언론 기자와 카메라는 어떻게 현장에 있었던 걸까? 진실이 무엇이었든 6월 3일의 텔레비전 뉴스는 무척이나 혼란한 시선으로 담겨진 아수라장을 보도했고, 6월 4일의 신문 보도 1면은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는 '듯한' 총리이자 스승의 무참한 모습으로 장식됐다. 경찰은 외대를 급습했고, 문익환 목사는 재수감되었으며, 정부는 88명의 재야인사 검거에 나섰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의 공안정국은 불과 몇 달의 진통 뒤에 그보다 더 강력한 '신공안정국'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렇게 막을 내린 1991년 5월정국은 정작 국가 폭력의 희생물이었던 재야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도리어 패륜적 민간 폭력의 낙인을 찍는 역설적인 결과를 빚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로 대표되는 군부, 경찰, 정보기구 연합으로서의 민정계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지목한 좌측의 극단을 성공적으로 도려내는 데 일조했고, 그로써 자신의 상징 권력을 과시할 수 있었던 언론은 핵심 파워엘리트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서 (이 또한 그들이 지목한) 우측의 극단을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를 계기로 과거의 도구적 언론에서 주창적^{advocate} 언론으로의 실질적 기능 전

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 기업과 언론인들은 파워엘리트의 주변부를 넘어 핵심적인 지위를 도모할 만큼 상당한 권력지분을 갖게 됐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특정 언론사주를 '밤의 대통령'이라 일컫는 경우가 심심찮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민정계의 탈락과 민주계의 부상, 그리고 이어진 김영삼 정부의 탄생을 통해 "언론의 권력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권력을 창출하는 권력" 등과 같이 언론을 권력과 직접 연결짓는 학술적 관찰 역시 빈번해졌다. 핵심 파워엘리트에게 부족한 담론 권력을 견지함으로써 독자적으로 핵심 파워엘리트와 거래를 시도하고, 그 가운데 특정 정치 세력을 잠정적으로 파워엘리트의 중앙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별하고 지원할 만큼 강력히 성장한 한국 언론의 특성 변화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언론이 파워엘리트의 주변부를 거쳐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에는, 위에서 언급한 담론 권력의 확보를 통한 권력 게임에의 참여라는 요인도 중요했지만, 언론기업이 국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물질 토대를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1980년대까지의 국내 언론이 국가의 직접적 통제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파워엘리트 구조 안에서 국가 권력이 자치하고 있는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했다는 측면 뿐 아니라, 그런 국가가 제공해 주는 경제적 특혜 없이는 언론기업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만큼 물질 토대가 빈약했다는 한계에 의해서도 발생한 일이었다. 때문에 이 무렵부터 '재벌신문' 혹은 '언론재벌'이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는 것, 즉 한국사회에서 언론이 재벌의 일원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주요 언론이 파워엘리트화의 중심부로 진입할 상징적 수단뿐 아니라 물질 수단까지도 확보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내 언론은 정보와 의견의 관문을 장악하여 담론적 영향력을 구축하고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자기 기반을 갖춘 '언론 권력'이 된 것이다. 특히 정치 권력의 주기적 재생산이라는 (한국사회로서는 실질적으로 처음 경험해보는) 제도정치의 복잡한 동학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기존 파워엘리트를 해체하고 재배열하는 정치 게임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이른바 '밤의 대통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요컨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였던 주류 언론이 마침내 타인의 희생으로 주어진 자유와 민주를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권력화 수단으로 철저히 활용했던 민주주의의 역설을 우리는 맥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3. 드러난 '87년 체제 아래 숨겨진 '91년 체제의 진로

우리 민주주의 제도적 가능성과 한계를 구획한 1987년 헌법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가 직선제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구래의 통치수단이었던 군대, 정보기관, 경찰기관을 여전히 폭력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했다. 요컨대 '87년 체제는 유사 파시즘으로서의 노태우 정부와 그것의 완화된 버전으로서의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작동을 원천적으로 제어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년 체제는, 노태우 정부를 대체한 김영삼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에서 확인됐듯, 그보다는 좀 더 자유 민주주의적인 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나는 그것을 느낀 '87년 체제의 '유효 진폭'을 결정한 '91년 체제의 숨겨진 효과라고 간주한다.

1987년에 전개된 시민항쟁의 에너지는 '87년 체제 안으로 다 가두어둘 수 없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내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 수준 이상의 좀 더 심층적이고 더 진보적인 지향의 사회적 상상력을 담고, 시민 민주주의에서 민중 민주주의까지 포괄하는 좀 더 목적의식적이고 전투적인 형태의 민주화 운동으로 조직화되는 길을 걸었다. 1991년은 '87년 체제 안으로 가두어 두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던 열망이 유사 파시즘의 반동 공세를 뚫고 나온, 조직화된 운동 역량의 최대치였던 셈이다. 1987년의 거리는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의 저항에 호응한 이른바 벡타이부대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메워졌다면, 그와 비슷한 규모에서, 그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격렬하게, 더 오랜 기간 지속된 1991년의 거리는 조직된 재야인사들의 단체, 학생 단체, 노동조합 등에 의해서 채워졌다.

비록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로 표현된) 유사 파시스트 국가의 물리적 폭력과 이를 지원한 '명목상의 자유주의적 기구들'로서의 언론, 검찰, 사법부의 상징적 폭력이 조직화된 전투적 민주주의 운동 세력 그리고 이에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절망적 염원'을 표출하며 스스로를 희생했던 많은 젊음을 역사 아래 파묻어버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김영삼 정부의 탄생과 그에 뒤이은 김대중 정부의 등장으로 표상되듯, 폭력적 국가기구 중심의 통치를 더 이상 우리 시민사회가 용인하지 않도록 이끈 데에는 1991년의 처절한 희생이 기여한 바 크다. 결국 1991년은 '87년 체제 아래에 여전히 잔존해 있던 연성 파시즘으로의 전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억제력인 동시에, 한국사회의 파워엘리트 중심축이 보수계 정당, 검찰, 사법부 그리고 언론 및 재벌 등의 '명목적 자유주의 기구들'로 결성된 주류 권력연합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한편 때때로 민주계 정당과 (조직화된) 노동 및 시민사회 계열의 비주류 권력연합이 그에 도전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도록 구조화한 숨은 동력으로서 작동해온 셈이다.

이른바 비주류 권력연합의 상층부가 (그리고 사실상 따져보면 주류 권력연합의 일부 역시) 소위 386/586으로 표현되는 '87년 체제의 주역에 의해 오랜 기간 장악되어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런 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물리적·상징적 권력 자원 측면에서 압도적 열세에 처한 이 비주류 권력연합이 종종 정치, 사회, 문화 부문에서 대항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은 1991

87년 항쟁은 91년 5월에 끝났다

홍기빈 | 정치경제학자

년의 트라우마와 죄책감을 간직하고 있는 그 술한 무명씨들의 존재이다. 흔히 언론에 의해 '신 콘트리트'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 가장 두텁고 굳건한 진보 지향적 세대로서 지목되는 이들은 제도권 정치보다는 사회 영역과 문화 영역에서, 그리고 생활세계 속 사실상 최초의 '시티즌'이자 초기 가상공간의 '네티즌'으로 포진해 있으면서, 주류 권력연합이 행사하는 물리적·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의 진지를 구축해왔다. 이들은 사실상 최초의 비주류 정치 권력이었던 노무현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고, 주류 권력연합의 상징 폭력에 의해 희생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87년 체제의 느슨함을 비집고 점점 더 유사 파시즘의 색채를 띠어갔던 보수계 정부에 대항했던 핵심 기반이었다. 이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사회정치적 에너지는 '촛불시위'의 형태로 잠정적인 시민 저항연합을 주기적으로 재활성화함으로써 의회, 언론, 검찰, 헌법재판소, 사법부 등 '명목상의' 자유주의 기구들이 우리 헌법의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압박한 힘이기도 했다.

요컨대 1991년은 느슨한 '87년 체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느슨함을 제한하여 형식적 차원에서나마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도록 방향타를 고정시켰던 역사적 계기였던 한편,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심층 민주주의를 지향하도록 이끈, 1980년과는 다소 구별되는 종류의 '죄책감'을 지닌 세대를 형성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에서 '명목상의 자유주의 기구들'이 결성해낸 주류 권력연합의 상징적 폭력, 그리고 그들이 필요에 따라 동원해낼 수 있는 선별적 형태의 물리적 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해낼 수 있는 체제를 아직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과연 1991년이 열망했던 심층 민주주의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여전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사회에 대한 저마다의 '상상'이 격렬히 충돌하는, 낮은 수준의 정체성 정치와 그만큼 낮은 수준의 반발^{backlash}이 얽혀드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1991년의 희생을 정당히 평가하고 계승하기 위한 방법이 그저 '91년 체제'라는 명칭을 얻어내거나, 또 다른 민주화운동으로서 제도적으로 정의되거나, 수많은 후일담 콘텐츠를 만들어 소비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민주적 한계, 즉 '명목상의 자유주의 기구들'에 대한 민주적 제어와 실질화 과제를 넘어,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일견 혼란스럽기만 한 다층적 적대를 민주주의의 역동적 에너지와 문제정의 및 해결의 계기로 전변시켜내기 위해, 다시 1991년이 2021년과 대화를 시작할 필요는 충분해 보인다.

1991년 4월 끝 무렵 명지대학교 학생 강경대씨가 시위 중 경찰폭력으로 사망하였다. 5월에도 여러 시민이 목숨을 끊으며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열이 계속되었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시위대가 서울 한복판을 행진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그랬던 민주화운동의 열기는 6월이 되자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1987년 개정 헌법이 만든 6공화국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1년의 대한민국은 그 6월에 배태되었다. 지금의 상태를 87년으로부터 이어지는 일종의 '영구혁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87년 운동의 급진적인 조류는 91년 5월의 투쟁에서 좌절하였고, 그 이상은 그 순간에 결정화^{結晶化}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87년은 91년 5월에 끝났으며, 지금의 현실은 그 단절 위에서 생겨난 '92년 체제'라고 할 수 있다.

87년 민주항쟁의 두 가지 흐름: 반독재 민주화와 자주민주통일

대중운동으로서의 87년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통한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을 요구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항쟁을 준비했던 당시의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이보다 훨씬 더 크고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꿈꾸었다. 전두환 군부독재의 타도나 직선제 개헌을 넘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지양하여 '자주민주통일'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운동권'의 합의였다.

대중 운동에서의 구호는 호헌철폐와 직선제 쟁취로 모아지는 이른바 '민주화'였다. 하지만 주지하듯이 한국의 '재야' 운동과 학생 운동은 80년 광주 이후 새로운 이념과 운동론의 유입으로 급격하게 급진화된 상태였기에, 단순한 직선제와 형식적 민주주의의 보장이 아닌,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급진적인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는 이념이 지배적인 상태였다. 즉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소박하고 대중적인 언어로 표현되지만, 민족민주혁명NDP 혹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NLPDR 등의 근본적인 사회 변혁을 통하여 현재의 사회 구조를 변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면한 호헌철폐와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급진파와 대중정치파가 그 이용방식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나오기는 했어도 (이른바 CA-NL의 논쟁, "파쇼하의 개헌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 등의 구호), 그러한 대중적 요구에서 보다 근본적 급진적 요구로 이어지는 과정이 하나로 이어지는 연속혁명(permanent revolution)이라는 인식은 차이가 없었다.

87년 직선제가 쟁취되고 88년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87년 운동은 이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등으로 발전하면서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88년 이후의 정치 상황: 제도 정치와 대중 투쟁의 혼재

하지만 1987년 6월이 지나자 시민들은 운동 상층과 지도부의 '변질'과 '무능력'에 계속 좌절해야 했다. 그해 12월의 대통령선거는 김대중·김영삼 두 정치인의 분열로 결국 '죽 썩어서 개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990년에는 김영삼세력이 수구세력과 합친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태동했다. 그럼에도 전민련 등의 재야운동 지도부나 전대협 등의 학생운동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뚫고 나갈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지 못했다. NL(민족해방)이니, PD(민중민주)니 하는 정파적 논리로 싸우고 심지어 제도 정치권의 눈치까지 보면서 무능력을 한껏 과시하였다. 이를 최대한 활용한 당시 지배세력은 통치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1991년부터 당시 노재봉 총리의 '공안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가혹한 국가폭력이 쏟아졌고, 강경대씨가 목숨을 잃은 등록금투쟁 같은 학내 시위가 벌어지게 됐다.

이는 제도정치와 대중투쟁의 혼재라는 88-91년의 독특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의회 내에서의 (민주자유당 합당 이전까지의) 불안정한 상태는 물론 노동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의 정치는 제도정치와 장외의 대중투쟁이 긴밀히 서로 연결되고 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전대협 전노협 등의 투쟁은 제도 정치에 영향을 주었고, 또 제도 정치 내에서 김대중 김영삼 등의 행보는 전민련 등의 노선에 영향을 주었다.

제도 정치의 분리와 지도부의 무능력 및 형해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주도권은 점차 제도 정치로 넘어가게 되었고, 특히 민주자유당 합당 이후에

는 더욱 더 그러하게 되었다. 그 중요한 이유로 앞에서 이야기한 운동 지도부의 무능력과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87년항쟁 이후 무엇보다 광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구·반동 세력을 척결한 뒤 급진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지길 갈망하던 '운동권' 학생들과 활동가들은 그 좌절감이 극에 달하였다. 강경대씨의 죽음은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자신의 목숨이라도 던져서 이 답보 상태를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한두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의 좌절감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었고, 그것이 엄청난 규모의 시위대로 나타나 1991년 5월 한달 서울 시내를 꽉 메우게 되었다.

하지만 운동 지도부나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관심은 여전했다. 사회운동 지도부는 '정권 타도'라는 무책임한 구호만 남발할 뿐, 대중 투쟁의 동력을 당시 현실에 유효하게 정치·사회 개혁의 동력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온통 뒤집혔으나 그 난리통 세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자 사회 전체의 피로감과 반감이 누적되고, 시위대 또한 체력적으로 고갈된다. 5월 말이 되자 본격적으로 반동이 시작된다. 정원식 총리가 외국어대에서 밀가루를 뒤집어쓴 사건이 터졌고, 강기훈씨 유서 대필 조작이 시작되었으며, 김지하·박홍 등이 마이크를 쥐게 된다. 6월로 다가온 광역단체장 지방선거에 정신이 팔린 야당들은 상황 수습을 원했고, 운동 지도부는 또 무능력했다. 6월20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민자당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자 세상은 무섭게 평안하고 틀잡힌 사회로 돌아간다. 그 꽃다운 청년들의 죽음이 과연 벌어지거나 했을까 싶도록. 그리고 다음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당선된다.

6공화국의 위기와 91년 5월 투쟁의 의의

30년 전 일을 차분히 복기하는 이유는 제발 거짓말들 그만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당시의 운동권 지도부 인물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도 정치인들로 '변질'하여 지금까지 '민주화세력'을 자칭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 오늘도 마치 1987년에 못다 이룬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진행되고 있는 듯 외치고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91년 당시 운동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 대거 제도 정치로 편입되어 들어갔음을 주목해야 한다. 전민련 지도부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대협과 이후의 한총련의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당시 "보수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던 김대중의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2021년까지도 이른바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운동 지도부의 제도 정치로의 흡수로 귀결된 것이며, 87년 투쟁의 급진적인 부분은 이에 소멸하고 말았다.

87년의 민주화운동은 91년 5월에 그렇게 끝이 났다. 87년의 이상은 91년 5월 그 아프고 꽃다운 죽음

1980~1990년대 도심시위와 경찰의 진압 양상 1991년 '5월 투쟁'을 중심으로¹⁾

이준영 |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들과 함께 꽃상여를 타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쪽저쪽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이권과 세력에 눈먼 자들이 30년간 되새김질해 놓은 비루한 6공화국일 뿐이다. 5년으로 단명한 '실패한 혁명', 그 87년의 비명을 다시 5월에 새긴다.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 87년을 또 들고나오는 이들을 그 비명 앞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 지금의 6공화국은 87년이 아닌 91년 5월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금 그 6공화국 체제가 뚜렷하게 한계를 보이고 있다. 거대 양당 체제는 이제 대중적인 조롱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른바 “민주화”라는 이념 또한 의문에 처하고 있다. 91년 5월의 이상과 이념은 그 시기적 특징에 분명히 묶여 있는 것이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평등 및 부조리, 그리고 한반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적 요소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라는 요구 만큼은 지금 지구적 불평등과 생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이 닥쳐오는 한반도에서 큰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화석으로 결정화되어 버린 91년 5월이 2021년의 상황에서 다시 적극적으로 재해석되어야 할 이유이다. 87년의 적자는 6공화국이 아니라 91년 54월이다.

1. 머리말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소외된 정치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제도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주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관철되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첫째, 대중매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둘째, 집회가 정부나 지배계층에 대해 항의적 의사표현을 하기 위한 집단적 권리라는 점 등 그 핵심이 정치적 항의라는 집회의 특성 때문이다.²⁾ 국가권력은 권력에 항의하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집회를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 또한 지속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

1) 당초 필자에게 제시된 주제는 1991년 5월과 미래였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 비상근직인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에 이름을 올려두고 있을 뿐, 1991년을 체험하지 않은 후속세대이다. 2000년대 이후 학번으로서 1991년을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은 1991년 당시 학생이었던 성균관대 학생 김귀정 열사를 추모하는 의례에 참여하는 일뿐이었다.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한 필자는 1991년 5월을 기억하고 미래에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91년 이후 세대로서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여전히 1991년 거리를 지배했던 혁명적 열기와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의 구조를 드러내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1년 5월투쟁 30년을 맞아 당시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원고를 작성한다.

2)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법학』 41, 2009, 351쪽.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³⁾

한국현대사에서 집회와 시위는 역사의 변곡점을 이루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1960년 4월혁명, 1964년 6.3항쟁,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1991년 5월 투쟁, 2002년 SOFA개정 촛불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2014년 세월호 촛불 집회,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까지. 도심의 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국현대사에서 정권을 수 차례나 바꿔놓았을 만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훗날 역사에 기억될만한 '승리한 시위' 혹은 '대중화에 성공한 집회'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한 시위'와 '막대한 희생을 치른 집회'가 존재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억누른 반공 권위주의 정부는 민중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법적·제도적·물리적 탄압수단을 이용해 탄압해왔다. 국가보안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앙정보부·검찰 등이 법적·제도적 탄압기구였다면, 경찰은 집회·시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투입되어 군중을 해산시키는 물리적 탄압기구였다. 법적·제도적 탄압기구와 그를 뒷받침하는 물리적 탄압기구는 군과 방첩기관, 검찰 등과 함께 공안기구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작동해오며 오랫동안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해왔다.

집회와 시위를 주도·기획하는 민주화운동진영에서는 경찰의 물리적 탄압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고안해냈다. 1980년대 이전까지 학생과 재야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의 발달이 미비한 상황에서 학연·지연 등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집회와 시위를 조직했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정서적 공감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을 경우 서울 도심에서 몇몇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벌어진 시위는 삼시간에 전국적인 규모의 대중운동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운동의 대중화·급진화 경향이 동시에 진전되면서, 집회와 시위의 전략전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도심'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키워드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도심의 광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주목했다. 이 과정에서 도심과 광장의 역사적 변천과정이 규명되었으며, 정치화된 공간으로서 도심·광장이 갖는 공간사회학적 특성이 밝혀졌다. 김백영은 도심 공간에 부여된 담론적 의미와 상징, 그리고 시민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공간으로서 도심과 광장에 주목한다.⁴⁾ 이러한 공간사회학은 도시공간과 신체가 맺는 관계에 대한 연구나 도시공간을 무대로 하는 집단적·의례적 실천에 대한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는 4월 혁명기의 시민들이 해방 이래 처음으로 광장을 점령함으로써 최초로 시민민주주의적 참여와 학습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이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서울을 초대형 도

시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추진되며 도시에 부여된 민주주의적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또한 도시 질서의 잠재적 위협 요인을 외곽으로 '추방'시키고자 한 결과 4월 혁명의 주된 동력으로 작용했던 도시 빈민들의 집합행동은 더 이상 도심부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도심 개발로 인해 주요 광장들의 면적이 대폭 축소되어, 이승만 정권 시기 집회와 시위의 현장으로서 광장이 지녔던 정치적 장소성은 현저히 탈각되었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과잉정치화된 도심부 광장의 지배적 장소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외곽의 광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이래의 도시 공간은 저항세력에게는 압도적인 역관계의 열세 속에 폭력적 군사정권의 강권이 관철되는 '지배의 공간'이었다. 1980년대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 가두시위는 권력이 강제하는 금기에 도전하는 행위였다. 가두시위는 도시의 공간질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지배질서 자체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적 행위였다.

한국경찰의 현대적 집회·시위 해산 작전은 1960년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와 궤를 같이하여 발전해왔다. 권혁은·김소진 등의 연구를 통해 1980년대 이전 한국 경찰의 현대적 시위 진압 전술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권혁은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가 1960년대 경찰의 공안기관으로서의 능력이 급성장하는 배경이었다고 주장한다. 이 시기 경찰은 미국의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교리의 영향 아래 대간첩작전 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화된 경찰력은 도심 시위 진압에 있어서도 이전과 비할바 없는 압도적 물리력을 갖추게 되었다.⁵⁾ 김소진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가 한국 경찰 조직의 변화와 치안업무 재편에 미친 영향에 보다 집중했다. 이 시기 경찰기동대 등 경찰 기구의 신설과 재편은 북한 공작원의 침투와 활동을 예방하는 동시에 도심 시위 진압이라는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다.⁶⁾ 최근 권혁은의 후속 연구는 5.18 항쟁기 시위진압 전술의 기원을 1960년대 이래 미국의 냉전 전략의 일환인 대반란전에 있다고 보면서, 1960년대 인권의 개념이 개입하여 변화한 미국 국내 진압 전술의 '현대화' 경향과 달리, 군부독재가 지배한 한국에서는 과격진압이 체질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⁷⁾

이 글은 위에서 검토한 연구사의 경향을 염두에 두고 도심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수성과 경찰 진압이라는 물리적 대응기구의 진압전술이라는 측면을 통해 1980~1990년대 집회·시위와 그 진압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핵심적인 조직과 인물을 중심으로 단일한 서사 만들기에 집중해온 기존 운동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60년대까지 미국의 대한경찰원조가 한국 경찰의 시위진압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1970년대와 1980년대 경찰조직의 변화와 대반란전 개념의 변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970~1980년대 경찰 조직의 변화는 이전 시기에 비해 국내적

3) 권혜령, 「집회시위의 전제로서 장소개념에 대한 고찰 - 미국의 '공적 광장이론'과 새로운 공간전술에 대한 비판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3,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4~5쪽.

4) 김백영, 「가두정치의 공간학 : 1980년대 서울시내 대학생 가두시위에 대한 공간적 분석」, 한국산업사회학회 역음, 『사회이론과 사회변혁』, 한울 아카데미, 2003; 김백영,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서강인문논총』 3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 권혁은, 「1960년대 미 대한경찰원조의 전개 - 경찰 '현대화'와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수행 -, 『사림』 74, 2020

6) 김소진, 「미국의 대한 경찰원조 변화와 한국경찰의 치안업무 재편(1953-1967)」,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7) 권혁은, 「5.18 항쟁기 시위 진압의 기원」, 『역사문제연구』 45, 역사문제연구소, 2021.

요인이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리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우선적으로 경찰 측에서 발행한 공간자료를 같이 검토함으로써 이 시기 시위 진압 양상 변천의 큰 열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1980~1990년대 도심 시위 양상

1) 1980년대 상반기 시위 양상의 변화

1970년대 후반, 긴급조치 9호 시기 학생운동은 폭압적인 유신체제에 맞서 점차 정예화된 형태의 비밀 결사를 구성하여 새로운 재생산 구조를 구축하고, 체계적·조직적인 형태의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분출했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체계를 갖추고 시위조직에 나섰다. 시위는 주로 교내에서 벌어졌지만, '5분 시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술이 고안되었으며 대학간 연합 시위도 기획된 바 있었다.⁸⁾

언더서클에 기반을 둔 유신체제하 운동방식은 1980년대 상반기까지 지속되었지만, 동원체제가 보다 조직화되고 대중화되었다. 학내에서의 시위도 이전보다 빈번해지고 수 천 명이 모이는 집회도 자주 발생했다. 학내의 시위와 집회는 인근의 가두시위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가두시위는 대부분 수백에서 1000명 내외의 소규모로 이루어 졌다.⁹⁾ 소위 유화국면 이후에는 캠퍼스 내에서의 학생운동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학내에서의 집회에 이어지는 가두시위가 일상화되었다.¹⁰⁾ 또한 이 시기 가두시위는 특정 이슈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들과의 연대를 꾀하는 '연대투쟁' 전술의 일환으로 신림동·신길동·가리봉동·대림동·목동·사당동·경동시장·미아삼거리·동대문시장 등과 같이 공단지역, 시장 및 빈민 주택가에서 이루어졌다.¹¹⁾

1985년 무렵이 되면 시위는 더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1985년 4월 전학련이 주최한 4.19 기념식에 참여한 여러 대학 학생 7,000여 명이 기념식 후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으며, 각 학교가 지역별로 분담하여 이날 저녁 늦게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¹²⁾ 5월에는 전국적으로 광주학살원흉처단투쟁이 전개되어 교내시위-가두진출 시도-경찰과 공방전-교내농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투쟁과정이 정착되었고, 투쟁규

모와 횡수도 비교할 수 없이 확대되었다.¹³⁾

이 시기 다른 하나의 주요한 투쟁양식으로는 권력기관에 대한 타격 및 점거농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중동원이 어려울 경우 소수 전위대가 공권력의 근거지가 되는 건물이나, 사안과 직접 관련된 주요 권력기관을 타격 대상으로 선전, 소수 정예를 '자살조'로 투입시켜 화염병 투척 등의 방법으로 타격하거나, 순식간에 기습 점거하여 운동의 요구사항을 구호로 외치거나 플래카드를 내걸어 대중적 관심을 환기하는 투쟁방법이었다. 주된 타격 대상이 된 것은 대학 인근의 파출소, 경찰서 등이었으며, 때로는 도심지의 주요 권력기관을 타격하거나 점거함으로써 대중적 관심을 촉발시키고자 했다. 당시 대표적 점거농성 사건으로는 미문화원, 민정당 연수원, 민정당 중앙당사 점거농성 사건을 들 수 있으며, 1986년 건국대 사건과 같이 오히려 지배권력의 능동적인 탄압공세로 인해 점거농성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2) 1980년대 하반기~1990년대 대규모 도심 집회

대규모 시민이 합세하는 대중적 가두시위가 일상화된 것은 1987년의 대중투쟁 경험에 힘입어 운동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이후였다. 이때부터 시위장소 또한 서울역, 종로, 을지로로 이어지는 도심지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신촌, 홍인문 등 시내 중심가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1988년 4월 26일 제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하자 민주화에 대한 대중의 열기는 급격하게 고양되었다. 1987년을 전후하여 형성된 부문별 대중운동은 풍부한 대중투쟁 경험과 강화된 조직력을 기반으로 대중적 투쟁조직을 건설했다. 학생운동의 경우 5월 초 서울을 동·서·남·북 지구로 나누어 각 지구 대표자협의회 발족식을 가진 뒤, 5월 8일에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협)를 결성하고, 8월 19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를 발족했다. 또한 1989년 1월 21일 발족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은 1987년 대선을 거치며 분열된 민주화운동 진영을 다시 통합하여 200여 단체를 망라하고 있었다.

운동진영의 정비는 집회 및 가두시위의 전술적 진전을 불러왔다.¹⁵⁾ 1988년 5월 13일한 발족한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은 '연합체' 혹은 '협의체' 수준에 그친 서대협보다 높은 수준의 조직력으로 서울 시내 가두시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이후 학생운동 진영의 투쟁전술은 다변화하여 폭력과 비폭력 전

8) 신동호, 「197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과 방식」, 정근식·이호룡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147~148쪽.

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이하 『한국민주화운동사3』, 돌베개, 2010, 189, 194, 198, 207~208쪽 참조.

10) 허은,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정근식·이호룡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201쪽

11) 김백영, 앞의 글, 2003, 365쪽.

12) 『한국민주화운동사3』, 2011 237쪽.

13) 『한국민주화운동사3』, 2011 238쪽.

14) 김백영, 앞의 논문, 2003, 365~366쪽.

15) 이 과정에서 시위 전술과 관련된 다양한 은어들이 탄생했다. 이른바 '택(tactics, 전술)'은 1980년대 학생들이 즐겨 쓴 대표적인 은어 가운데 하나였다. 시내는 물론, 학내 프락치 등 안기부 정보요원의 감시의 눈길이 교내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심지어 도청장치가 건물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학생들은 '보안'을 위해 각양각색의 은어를 만들어 사용했다. 대다수의 비무장 시위참가자들을 사수·호위하는 소수의 무장조원들은 '전투조(C.C: Combat Cell)'라 불렸다. 이들의 무기가 된 것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그리고 '짱돌'로서, 방어장비가 없었으므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팸(Family)'은 언더서클 중심의 학생운동 체계속에서 정파별 비합법 지하조직에 기반한 소규모 모임을 뜻했다. 이외에도 '골(class: 계급)', '스트(struggle: 투쟁)', '에네미(enemy: 전경)', '오(organization: 조직)' 등의 은어도 사용되었다. 김백영, 앞의 글, 2003, 363, 367쪽 각주 참조.

술이 상황에 따라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 신축성있게 운용되는가 하면, 지구별 전술이 구사되었고, '사수대'·'결사대'·'체포조'·'선봉대' 등을 조직하여 시위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선전전술이 구사되었다.¹⁶⁾

이에 대응하여 노태우 정권은 1989년 문익환 목사 방북 사건 등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다. 집권세력의 반격은 1990년 1월 22일 3당 합당으로 이어졌다. 3당 합당의 결과 여소야대의 4당 체제가 해체되면서 거대여당인 민주자유당이 개헌선을 상회하는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3당 합당 후 정부와 여당은 노동조합법 관련 법안 폐기, 군 조직법 개정안 날치기 처리,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 금융실명제 유보, 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을 통해 1987년 이후 열린 정치공간을 축소하고 민주적 과제들을 변형하거나 유보시켰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 혁명적으로 고양된 분위기 속에서 대중적 동원능력을 갖추게 된 사회운동세력과 노태우 정권의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1991년 5월투쟁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명지대생 강경대 군 치사사건이 발생한 4월 26일부터 투쟁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6월 29일까지 대략 60여 일까지 대략 60여 일에 걸쳐 공안정국의 와중에 전개되었다. 이 기간에 전국적으로 2,361회의 집회가 열렸고, 6공화국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들이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학생, 빈민, 노동자 등 11명이 분신했고,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 위원장의 의문사와 성균관대 김귀정의 강경진압에 의한 질식사까지 포함하여 모두 13명이 사망했다.¹⁸⁾ 1991년 5월투쟁은 명지대생 강경대 군 치사사건이 대중적 공분을 획득하면서, 이를 계기로 노태우 정권 집권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표출된 공안통치적 폭압과 각종 비리와 실정(수서비리사건과 폐놀사건, 민자당 당권 다툼 등), 그리고 물가폭등과 주택문제 등 민생파탄의 지속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결합되어 표출된 사건이었다.¹⁹⁾

1991년 5월투쟁의 특징은 연이은 희생·분신에 따른 장의 행위가 대중시위와 결합했다는 점이었다. 이는 1987년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이어지는 것으로, 한국현대사에서 죽음이 갖는 대중동원력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 것이었다. 5월투쟁을 이끈 지도부는 물론 언론에서도 1991년 5월을 1987년 6월과 유비²⁰⁾했다. '제2의 6월 항쟁'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1987년 이래의 혁명적 열기가 대중을 거리에 나서게 했다. 1991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반정부 가두시위가 전국적 차원에서 계속되었다.²⁰⁾

이 시기 서울에서 벌어진 가장 큰 가두시위는 강경대 열사의 시청 앞 노제를 둘러싸고 이를 봉쇄하려는

경찰측과 학생·재야·시민 등 장례행렬 간의 신촌로타리에서의 격렬한 싸움이였다. 결국 1987년도와는 달리, 집중 투입된 경찰의 물리력과 바리케이드에 막혀 시청 앞 노제는 성사되지 못했고, 학생·노동자들의 분신과 폭행치사, 군인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왜곡보도에 힘입은 정권의 학생 운동에 대한 역공세로 상황은 반전되었고, 정국은 곧 이른 선거국면으로 넘어가고 말았다.²¹⁾

1991년 5월투쟁을 전후한 시기 시위의 양상은 장례식이나 노제 등 의례의 형태를 띠는 합법적 공개시위와 도심·부도심 지역에서 기습적으로 수행되는 반합법적 투쟁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후자의 가두시위 장소는 시위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선정되었는데, 물리적 지형(접근로 및 퇴각로의 확보), 주변 환경(유동 인구 및 정착인구의 규모 및 성격), 주체역량(특히 학생운동의 조직력 및 동원력), 공권력 배치 상황, 객관적 정세, 장소의 상징성 등이 고려대상이었다. 지도부는 시위를 계획할 때마다 매번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정 장소를 선정한 후 시위 직전에 경찰조를 파견해 주변 여건을 재차 확인한 후에야 전술지침을 확정·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들 시위 지도부에게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일정한 정형화된 후보지들이 있었으므로, 결정은 상황에 따라 이들 중 한 두 개의 구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경찰 병력의 배치 현황이었다. 시위가 소규모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시위 발발 지점으로부터 공권력 투입까지의 예상 소요시간(시위 지대와 병력 주둔지 간의 거리)이 가장 큰 변수였고, 대규모 연대투쟁에 의해 압도적인 수의 우위가 보장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공권력의 대응태세(진압작전의 양상)가 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²²⁾

1991년 5월 서울에서의 대규모 시위의 흐름은 1987년 이래 창출된 도심 집회의 양상에 따랐다. 이는 첫째, 시청-종로-청계천·광고-명동을 잇는 흐름, 둘째, 명동-을지로-종로5·6가-동대문-명동을 잇는 흐름, 셋째, 서울역-회현-명동-충무로를 잇는 흐름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로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다수의 시위대열이 가장 빈번하게 선택했던 경로였을 따름이며 통일되거나 정형화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시위대의 흐름은 항상 가변적이었다.²³⁾

이 시기 시위의 또 하나의 공통된 특징은 명동으로 집결했다는 것이다. 명동성당은 1980년대 이래 시위 과정에서 저항운동 진여이 공간적으로 확보한 도심지 가두시위의 교두보였다. 명동성당은 도심지 대중투

20) 김정환, 앞의 책, 1998, 50쪽. 아래 표는 김정환이 『한겨레신문』의 해당일자 신문기사를 통해 시위 참여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날짜	4/29	5/1	5/4	5/9	5/14	5/18	5/25	6/8
인원	5만	10만	20만	50만	50만	40만	17만	3만

21) 김백영, 앞의 글, 2003, 369쪽.

22) 김백영, 앞의 글, 2003, 371쪽.

23) 김백영, 앞의 글, 2003, 372쪽.

16) 김백영, 앞의 논문, 2011, 367-368쪽.

17) 김정환, 『대중과 폭력 - 1991년 5월의 기억』, 이후, 1998, 41쪽.

18) 김정환, 「권력은 주체를 슬프게 한다: 91년 5월투쟁 읽기」,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편,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2002, 46쪽.

19) 『한국민주화운동사3』, 2011, 464쪽.

쟁의 집결지이자 발산점이었으며, 시내의 주요 가로가 완전히 봉쇄되어 수세에 몰린 위기 상황에서는 도심지의 마지막 퇴로이자 피신처였다.²⁴⁾

3. 1980~1990년대 공안체제와 시위 진압 전술

1) 1980년대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응

1980년대 이전 집회·시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응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다수 시민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에 대해서는 주동자 몇몇을 현장에서 연행 후 훈방조치하거나 집시법 등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구형이나 선고에서는 실형이 언도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조기에 석방되었다. 다음으로, 정권이 관심을 갖는 주요 시국사건들은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었다. 학생운동의 경우 당시 정세에 따라 북한에 연루된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나 혁신·진보정치 세력과 연관된 조직사건이 터져 나왔는데, 이는 많은 경우 정권차원에서 여론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나 고조되는 학생운동의 기세를 꺾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발생했다.²⁵⁾

아직 공고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일시적인 대중시위 중심의 운동양상으로 전개되었던 1980년대 이전의 학생운동은 강력한 정권의 강력한 물리적·이념적 탄압이 가해지면 일거에 잦아들곤 했다. 대규모 대중시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소규모 조직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라는 대조 양상에 따라 공안기구의 탄압 메커니즘도 이중적으로 작동했다. 집시법 등 경범죄로 처리될 경우 일선 경찰이나 대학 학사기구를 통한 처벌이 이루어졌던데 반해, 후자와 같이 엄중한 시국사건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중앙정보부 등 상급 정보기관이 직접 관여했다.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외 정보사항 및 범죄수사와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 정보수사활동을 조정감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중앙정보부가 정부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음을 의미했다. 검찰은 정부수립 당시에는 수사지휘권·기소권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내에 정보업무를 관장하는 사찰과, 특무과 등을 통해 정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경찰에도 대공관련 업무가 분장되어 있었으나, 1974년에야 치안본부 3부에 정보 전담부서가 설치될 정도로 경찰은 대공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전 경찰의 학생운동 통제는 학생시위 처리 및 집시법 관련 경

범죄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학생운동의 이념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1981년 치안본부에 대공과가 설치되면서부터였다.

법무부 검찰국에도 정보과가 설치되어 두어 “범죄 정보, 소관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연락 및 특수단체와 개인의 사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한은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중앙정보부, 군대 내 정보·수사기관, 경찰 등의 도전에 따라 계속 축소되어 왔다. 특히 5.16쿠데타 이후 검찰국 정보과가 폐지되면서 소속 정보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폐지됨으로써,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관련 정보와 수사에 관한 한 검찰은 중앙정보부의 사실상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유신체제 내내 반정부 운동이 끊이지 않고 공안사건 수요가 증대하자 1973년 대검찰청에 공안부가 신설되었다. 검찰 공안부가 학원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게 되는 것은 1986년에 이르러서였다.

군의 정보기구도 학원문제와 대공문제에 개입할 수 있었는데,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방첩대’를 모태로 하는 보안부대-보안사-기무사 라인이 그것이다. 그러나 군 보안기구의 사회운동에 대한 개입의 실상은 아직 거의 드러난 것이 없다. 다만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 등을 통해 이러한 기구가 사회운동과 관련된 민간 영역에 개입해 온 역사가 뿌리깊다는 것 정도만을 추측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1980년대 하반기~1990년대 대규모 도심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의 급진화 경향 속에서 공안당국의 성격 역시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갔다. 1980년대 중반이 되면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이 전반적으로 대중화·급진화되어감에 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이 급증했다. 1987년 이후 사회운동의 대중적 분출과 시국사건의 급증은 공안당국으로 하여금 시위 진압을 위한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제도적으로는 정보경찰 중심의 대공라인을 새롭게 편성하여 확충하고, 기존 정보기관을 강화해 나갔다. 이는 시위를 조직하는 학생운동 및 재야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제5공화국 시기 경찰의 대공업무는 1981년 6월 대공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경찰 부서로서 치안본부 제4부가 설치됨으로서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대공업무는 ‘정보’ 업무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와 “대공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대공에 관한 첩보수집 및 분석, 간첩 및 사회안전사범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지도” 등 본격적인 대공업무에 대한 기획 및 첩보수집,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찰 대공부서 확대의 정점을 이룬 시기가 바로 1986년이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같은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1987년 이후 수만 명이상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가 급증하면서, 1989년 2월 14일에는 시위관련사범 주관부서를 대공과에서 수사과로 이관하여 수사2계를 신설하고 기존의 수사계는 수사1계로 개칭하였다. 같은해 8월 7일에는 기동대와 교통과 증설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²⁶⁾

현장 대응의 측면에서 경찰은 사복체포조, 일명 ‘백골단’을 모집하여 점차 조직화되어가는 시위 양상

24) 김백영, 앞의 글, 2003, 374쪽.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1 -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558쪽.

에 대응하고자 했다. '백골단'은 1985년 8월 1일 서울시장 명의로 모집되며 대부분 무술 유단자와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이들은 일반 전투경찰들과 달리 흰색헬멧·청색자켓·단봉·방패 등을 착용하고, 시위대에 난입하여 시위대오를 흐트러 놓고 주동자를 연행하는 방식의 작전을 수행했다.²⁷⁾ 1991년 현재 서울시경에서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는 기동대와 전경대는 63개 중대 7천 5백여 명이었다. 이 가운데 사복체포조 '백골단'은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사복중대'로 불리는 10개 중대와 나머지 중대에서 1개 소대 30여 명 씩으로 구성돼 있었다.²⁸⁾ 사복체포조의 비율은 1989년 이후 크게 늘어나 시위현장에서 정복경찰보다 사복체포조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으며, 거리 시위에선 사복체포조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다.²⁹⁾ 이들은 1980~90년대 전두환·노태우 정권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독재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한편 사복체포조가 시위진압에 투입되면서 학생들의 시위도 각목과 화염병을 던지는 등 더욱 과격화 되었다.

이 시기 경찰의 시위대응 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90년 10월 13일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언'이었다. 1989년 5월 3일 동의대에서 진압 경찰 8명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 이후 경찰 등 관계 당국은 특히 '불법·폭력 집단행위'에 초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서울시경은 1990년 10월 17일 '대범죄 전쟁선포에 따른 실천계획'이라는 제목의 후속조치를 발표하여, 무엇보다 앞서 불법·폭력 집단시위에 대해 국가보위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 국기를 수호하고 사회안정을 피할 것이라며, "국가 주요시설과 경찰관서 기습은 과감한 무기사용으로 완전히 제압한다"는 방침을 밝혀 학생들의 기습시위 진압 때 경찰의 무기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서울시경은 거리시위 등의 경우 이제까지의 '공격형 진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검거 위주의 포위진압' 작전을 펴고, 대학생들의 교문 진출과 도로점거 시위 등을 막지 못하는 지휘관은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경은 상습시위와 시위 예고장소에 경찰력을 먼저 투입, 시위장소를 점거해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한편, 화염병 투척자는 교내까지 들어가 최대한 검거하고 화염병 제조·보관장소를 수시로 압수수색하여 모두 회수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³⁰⁾ 이는 1989년 5월 28일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이 통과된 것의 연장이었다.

1987년 이후 수 만 명 이상이 집결하는 대규모 도심집회가 빈번해지면서 경찰의 시위 진압 전술도 변화했다. 1987년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발생하면 경찰병력 역시 분산되어 집회에 참여한 군중 앞에 무력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경찰은 지속적으로 시위 진압에 동원할 수 있는 경찰병력

을 늘려왔다. 경찰은 1990년 시위진압경찰을 1월 현재 357개 중대에서 8,000여 명을 늘린 431개 중대 60,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경 1,830명이 추가충원되어 시위진압기동대 10개 중대를 새로 창설, 각종 시위에 대응하도록 했다.³¹⁾

경찰병력 증강 뿐만 아니라 시위 진압 장비도 현대화하고 사용량을 대폭 늘렸다. 1980년대 초 최루탄에만 의존했던 경찰의 시위진압 장비는 1991년 현재 물대포, M-16소총, 38구경 권총, 쇠파이프, 각목, 돌 등 10여 가지가 넘게 발전을 거듭해왔다.³²⁾ 1990년 5월 치안본부가 작성한 '화확탄 확보 및 수급계획'에 따르면 1990년 5개월 동안 사용된 각종 최루탄 개수가, 1989년 같은 기간 동안 사용된 최루탄 보다 42%나 더 늘었다. 최루탄 사용이 늘어나 수급이 부족해지자, 경찰은 군으로부터 다연발최루탄 1천 세트, KM-25최루탄 10만 발, 최루가스 분말 4,500kg을 차용해오기도 했다.³³⁾ 이에 따라 치안본부가 1990년 10개월 동안 최루탄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44억 원으로 애초 예산 7억 원의 6배를 넘었다. 같은 기간 사용된 최루탄은 KM-25(사과탄) 11만 3천 발, SY-44탄 6만 6천 발, KP탄 3만 5천발, 다연발탄 1천 4백세트 등 총 21만 6천 발로 1989년에 비해 30.5%나 증가했다.³⁴⁾ 최루탄 사용량이 증가한 것과 함께 45도 각도 조준원칙 등 장비사용규칙을 지키지 않고 시위대에 상해를 입히기 위해 직격 발사하는 일도 다반사였다.³⁵⁾ 광주의 '최루탄부상자협의회'가 전남대병원 등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한해 광주 지역에서만 154명의 시민·학생들이 최루탄에 부상당했으며, 전국적으로는 수천 명이 최루탄에 의해 부상당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1991년 4월 19일 경남대생 정진태 씨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왼쪽 두개골이 함몰됐고, 원광대생 유철근 씨도 두개골이 골절됐다. 20일에는 전남대 본관에서 시위를 벌이던 최강일 씨도 같은 이유로 왼쪽눈을 실명했다.³⁶⁾

아울러 일선 현장에 적용되는 진압전술도 공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진압의 목표는 '해산방식'에서 '공격방식'으로 바뀌어 시위대는 신속하게 제압할 '대상'이 되었다. 진압경찰은 기존의 주동자 체포-시위대 해산-재집결 방지 등 3단계 진압전술 목표를 '시위자 전원 검거'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1) '선무방송'을 통해 정복진압병력을 전진배치시켜 위력을 과시하고, 2) SY-44 최루탄 등을 집중사격하여 시위대를 흩뜨려 놓은 다음, 3) 다연발탄 등을 일제히 쏘면서 사복체포조(백골단)가 일거에 시위대를 향해 뛰어드는 전

31) 「시위진압 '공격형' 전환」, 『한겨레신문』, 1990.01.17. 10면.

32)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4 - 갈수록 살벌한 시위진압 장비」, 『한겨레신문』, 1991.05.02. 3면.

33) 「최루탄 너무 쏜다」, 『한겨레신문』, 1990.05.31. 11면.

34)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4 - 갈수록 살벌한 시위진압 장비」, 『한겨레신문』, 1991.05.02. 3면.

35) 치안본부는 이한열 열사 사건 이후 45도 이상의 각도에서만 최루탄이 발사되는 안전장치를 발사기 원체스터 소총에 설치해 직격발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의 진압전경들은 시위가 한창인 상황에서는 발사기를 순간적으로 앞으로 내리면서 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6)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5 - 최루탄 부상 지난해 수천명 달해」, 『한겨레신문』, 1991.05.03. 3면

26)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 2011, 257쪽.

27) 「시대가 만든 '폭력꾼' 백골단」, 『시사저널』 80, 1991년 5월호.

28)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2 - 시위현장의 무법자 '백골단」, 『한겨레신문』, 1991.04.26. 3면.

29)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3 - '공격형 진압' 시위대 '적'으로 간주」, 『한겨레신문』, 1991.04.30. 3면.

30) 「경찰, 시위와 사실상 전쟁 선언」, 『한겨레신문』, 1990.10.18. 15면.

면적인 작전이 시행되었다. 또한 1991년 3월 19일 치안본부가 전국 일선 경찰로 하달한 '시위진압술 및 장비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대·소대 단위로 횡대대형을 지어 '일보전진·일보후퇴'를 반복하던 진압전술에서 후퇴개념을 없애고 '진진공격'만이 강조되었다. 또한 시위자에 대한 신체가적 방식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인 공격동작을 추가했으며, 진압봉을 아무런 제한 없이 위에서 아래로 신체 대부분의 부위에 무차별 가격할 수 있도록 한 신형 봉술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길이 50cm·70cm짜리 두 가지 뿐이었던 기존의 개인용 진압봉 이외에 110cm짜리 대형 죽도를 새로 만들어 사복체포조의 경우 각 소대 2개 분대에 지급했다. 1990년대 초 시위 진압 전경 부대가 평소부터 다량 보유하고, 시위 진압 때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쇠파이프도 1991년 들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연행술에 있어서도 종전의 '소매잡기' 방식을 버리고 '손목짜기', '양팔잡기', '양어깨누르기' 등 신체에 타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시위대를 붙잡게 하고 있다. 방패술에도 '밀면서 쳐' 등 공격적인 동작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보통 정복중대가 두 손으로 들게 되는 구형 대형 방패 외에 한손으로만 들고 시위대에 근접, 격투를 벌일 수 있도록 제작된 사복체포조용의 소형 타원형 방패가 지급되기도 했다.³⁷⁾ 방어용 장비인 방패를 변형하여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거나, 시위대에서 날아온 돌맹이를 다시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은 시위 현장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다시피 했다. 이는 연일 이어지는 시위에서 폭력에 노출됨에 따라 시위대를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진압겨울 내부에서 만연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진압작전뿐만 아니라 소속 지방경찰청의 민생치안업무에도 동원되었는데, 이는 당시부터 '치안설거지'라 표현될 만큼 일상적인 것이었다.³⁸⁾ 이처럼 진압작전에 동원되는 전·의경 및 일반경찰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었고, 부대 내에 만연한 폭력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써 집단탈영과 같은 단체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했다.³⁹⁾ 시위대에 대한 적개심과 폭력은 개별 진압경찰에게 가해지는 일상적 하중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4. 맺음말

(추후보완)

〈자료 및 참고문헌〉

37) 「공권력폭력 이대로 좋은가3 - '공격형 진압' 시위대 '적'으로 간주」, 『한겨레신문』, 1991.04.30. 3면.
 38) 「의무경찰 치안설거지 등 「긋은일」로 사기저하」, 『경향신문』, 1990.06.27. 10면.
 39) 「전경 백여명 기물부수고 난동」, 『경향신문』, 1990.06.02. 15면; 「20살 전경 역울한 죽음, 고참에 맞아 숨져 ... 유족들 분노」, 『동아일보』, 1991.01.05. 17면.

1. 자료

1) 전대협 등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학생운동 투쟁지침·시위전술 관련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투쟁국, 「'92년 하반기 전대협 임시총회 사수대 자료집」, 1992.10.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대의원대회 사수대 조직을 위하여」, 1991
 남대협투쟁국 편, 『전투조직 건설의 이론과 경험: 오월대, 녹두대 사례를 중심으로』, 한, 1990
 한유진·이서하 지음, 『오월대』, 힘, 1991
 미상, 「84.85.86년 전국적 단위 학운의 투쟁조직의 평가」, 1986
 미상, 「학운의 조직적 전망에 대한 제언(1)」, 1988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청년.학생운동 10월 동향 보고서」, 1988.11.00

2) 서대협(서총련) 산하 학생투쟁연합·투쟁국의 투쟁지침

「학살원흉 노태우 집권분쇄 학생투쟁연합 발족 선언문」, 1987.11.13.
 「11.5.투쟁의 파고를 가일층 진전시키자!」, 1988.11.16
 「11월 5일 여의도 케이비에스 투쟁 청년학도 지침」, 1988.12.4.
 「반합공개 투쟁단체(소위 민주화운동학생투쟁연합)건설에 대한 일제안」, 1988.10.12.
 「제2기 학투련건설 및 향후 투쟁 방침 제안서」, 1988.10.00
 「전대협 지구대표자회의 산하에 "지구투쟁주체 회의"를 건설할데 대하여」, 1989.1.30.
 「2월18일, 19일 투쟁 전술지침에 대하여」, 1989.2.16.
 「불멸의 항전으로 계속 전진하자-사과해명 어렵었다 전두환, 이순자를 구속, 처벌하라」, 1989.11.25

3) 1991년 당시 생산된 자료

고강경대열사살인폭력규탄과공안통치종식을위한범국민대책회의, 「故 강경대열사 폭력살인사건의 검찰수사발표문(1991.5.6)에 대한 범국민대책회의의 입장」, 1991
 강경대열사1주기추모및정신계승을위한명지대학교대책위원회, 「강경대열사1주기추모집」, 1992
 김귀정열사추모사업회·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고 김귀정 재판 관련 자료』

김귀정열사추모사업회·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고 김귀정 진상규명활동 관련 자료』
김귀정열사추모사업회·성균관대 민주동문회, 『고 김귀정 추모활동 및 기타 관련 자료』

4) 1980년대 중반 시위전술 관련

村田宏雄(무라다 가즈오) 지음, 유성만 옮김, 『조직활동의 지혜』, 이삭, 1984
민차산 지음, 『혁명전위의 전략과 전술』, 바람과 물결, 1988

5) 경찰의 시위진압전술 관련

강영규 외, 『경찰경비총서』, 경찰대학, 2010
경찰사편찬위원회, 『경찰 50년사』, 경찰청, 1995
김주혁, 「경찰관 기동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3
김창윤,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0, 2018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3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 2011, 257쪽.

2. 참고문헌

강정인, 『죽음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 91년 5월투쟁과 김은국의 <순교자>로 본 정치·죽음·진실』, 책 세상, 2021
권혜령, 「집회시위의 전제로서 장소개념에 대한 고찰 - 미국의 '공적 광장이론'과 새로운 공간전술에 대한 비판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3,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이매진, 2011
김정한, 『대중과 폭력 - 1991년 5월의 기억』, 이후, 1998
김종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법학』 41,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2010
이동권, 『강경대 평전』, 민중의 소리, 2011
이혜영, 『한국 민중항쟁 답사기 : 광주·전남 편 - 나를 만든 현대사, 그날의 함성 속으로』, 내일을여는

책, 2020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편,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2002
전재호·김원·김정한, 『91년 5월 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권혁은, 「1960년대 미 대한경찰원조의 전개 - 경찰 '현대화'와 대반란전(counterinsurgency) 수행 -」, 『사림』 74, 2020
권혁은, 「5.18 항쟁기 시위 진압의 기원」, 『역사문제연구』 45, 역사문제연구소, 2021.
김백영, 「가두정치의 공간학 : 1980년대 서울시내 대학생 가두시위에 대한 공간적 분석」,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사회이론과 사회변혁』, 한울 아카데미, 2003
김백영, 「4·19와 5·16의 공간사회학」, 『서강인문논총』 3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김소진, 「미국의 대한 경찰원조 변화와 한국경찰의 치안업무 재편(1953~1967)」, 고려대 한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0
신동호, 「1970년대 학생운동의 특징과 방식」, 정근식·이호룡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허은, 「1980년대 상반기 학생운동 체계의 변화와 학생운동 문화의 확산」, 정근식·이호룡 편, 『학생운동의 시대』, 선인, 2013



5월 투쟁의 자식들과 좌절한 것들의 연대

손우정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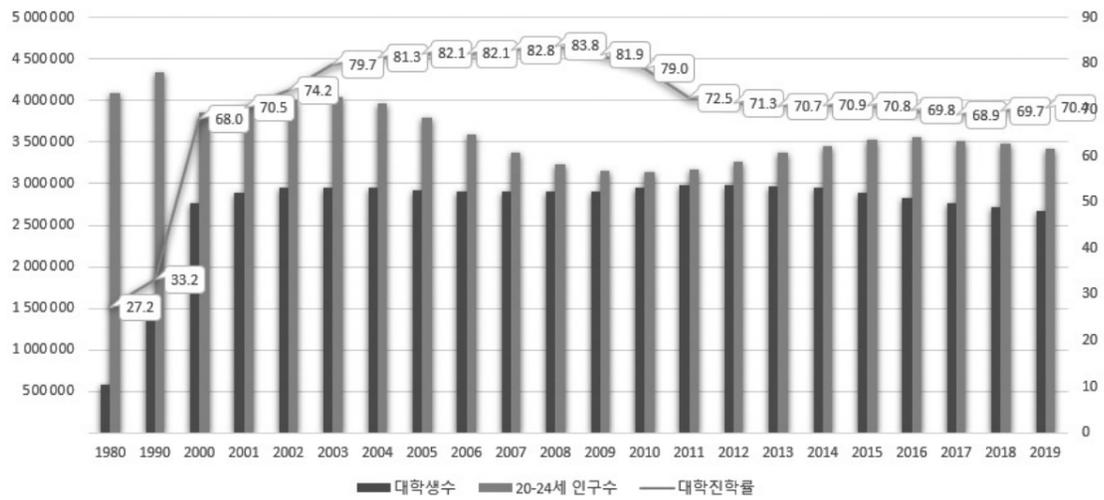
0.

91년 체제(정준희), 또는 92년 체제(홍기빈)를 제안하는 발표자들은 6월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일정한 단절이 91년 5월 투쟁을 계기로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 91년, 좀 더 넓게는 92년 대선에 이르는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 사이에는 일정한 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6월항쟁 이후에서 91년 5월 투쟁, 더 길게는 92년 대선까지는 87년 체제의 구성적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투쟁이 격화한 시기다.¹⁾ 각축의 한편으로는 3당 합당 등 보수세력의 재편과 시장 권력 간의 지배 동맹이 자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급진적 대안과 분단체제에 대한 저항을 매개로 조직된 민중적 연대가 자리한다. 91년 5월 투쟁의 좌절은 4년간 진행되어온 이 격렬한 투쟁에 1차 종지부를 찍으면서 지배 세력의 승리와 87년 체제의 공고화로 이어졌다.

5월 투쟁은 좌절했지만, 그냥 사라지거나 역사의 밑자락에 내동댕이쳐진 것만은 아니다. 5월 투쟁은 ‘청산’과 ‘분화’, ‘계승’으로 요약되는 분기^{分岐}의 길목이기도 했다. 91년은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신노선’으로 상징되는 합법 진보정당 운동이 출현한 해이기도 하며 이를 전후해 민중운동과 차별화된 시민운동이 성장했고, 일부 재야인사와 운동권 지도부가 제도 정당의 ‘젊은 피’로 수혈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논

1) 토론자는 두 발표자의 해석에 동의하지만, 91년 5월 투쟁의 좌절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87년 체제에서 91년, 또는 92년 체제로의 이행)을 가져왔다고보다 지배 세력의 승리로 인해 이들의 87년 체제 프로젝트(분단체제를 전제로 한 자유주의 프로젝트)가 전면화하게 된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87년부터 91년, 또는 92년 대선까지의 시기는 독재의 잔재와 자유주의적 저항, 급진적 대항정치가 공존한 87년 체제의 ‘과도기’로 볼 수 있다.

〈그림〉 대학진학률, 대학생 수, 20~24세 인구수 변화 추이(1980~2019)



· 고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대학합격자 기준이며, 2011년부터는 대학등록자 기준이다(교육부 조사지침 변경). 따라서 2011년 이후 대학진학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과 유사한 추이가 계속되고 있다.

· 20~24세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추계(인구변동요인별 중위가정을 조합한 결과)

· 대학생 수는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 자료 중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합한 수치(대학원, 기타 항목 제외)

쟁의 80년대는 5월 투쟁을 분기로 분열의 90년대에 자리를 내어주었고, 6월항쟁과 같은 최대 도전연합은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5월 투쟁을 설명하는 '모든 것'은 아니다. 91년의 좌절은 전향과 이탈, 분열과 냉소가 뒤범벅된 혼란을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설령 사회적 고립과 조롱의 대상일지언정 좌절된 투쟁의 가치를 끝까지 이어 나가려는 일군의 흐름으로 살아남았다. 이 흐름을 대표하는 것은 90년대 학생운동이었는데, 80년대 학생운동이 80년 5월 광주의 자식들이라면, 90년대 학생운동은 91년 5월 투쟁의 자식들이다.

91년 5월 투쟁의 자식들

오늘날 각종 여론조사에 (전통적 의미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나타나는 것은 40대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집단은 대략 9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대학을 다닌 이들이다. 이 세대는 20대였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일관된 진보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이 배경에는 91년 5월 투쟁의 유산이 존재한다.

전문대학을 포함해 대학진학률이 채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80년대와 달리, 90년대 초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생수는 90년대 내내 지속적이고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5월 투쟁의 계승자들은 그 규모 면에서는 외려 80년대 학생운동을 압도했다. 사회 전반의 혁명적 열기는 눈에 띄게 줄고 있었지만, 전국에서 우후죽순 대학이 설립되는 흐름을 따라 운동권 학생회가 깊숙하게 확산되었다. 90년대 학생운동은 5월 투쟁이 그랬던 것처럼 94년 이른바 조문 파동과 96년 연세대 사건, 97년 한총련 사건을 겪으며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시달렸다. 김영삼 정부 말기의 거대한 공세 속에서 학생운동의 대중성은 급격히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20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대학사회의 헤게모니는 운동권 학생회가 쥐고 있었다.

한편 이 세대는 외환위기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조직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세대이기도 하다. 3저 호황 속에 청년기를 보낸 윗세대와 달리, 5월 투쟁의 자식들은 저항문화로 가득 찬 대학 생활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결정적으로 뒤집을 만한 사회적 성공이나 안락의 유혹에 덜 노출되었다. 90년대 중후반을 거치며 친북좌파 용공세력으로 찍힌 운동권의 이미지는 제도 정당의 젊은 피 수혈 대상이 될만한 매력을 제공하지도 못했고, 스스로도 반운동권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제도 정당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²⁾

이것이 5월 투쟁의 자식들이 이전 세대, 그리고 이후 세대와 각기 다른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차별화된 특성을 갖는 지점이다. 이전 세대와는 젊은 시기의 저항문화를 공유하지만, 그들처럼 기성 정당과의 연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이후 세대처럼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신자유주의 정글 속으로 내쳐졌지만,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프레임은 가지고 있었다. MZ세대에게 신자유주의는 '원래부터 그런 것'이었지만, 97세대³⁾에게 신자유주의는 막강한 국가폭력, 그리고 당시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던 청년 실업과 함께 도둑처럼 다가온,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이었다.

91년의 열사 정국이 5월 투쟁의 좌절과 함께 종식된 것도 아니다. 당장 1992년 한신대생 박태순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전남대생 문승필이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철거민 김선호가 용역 깡패의 폭행으로 사망

2) 홍기빈은 "한총련의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당시 '보수야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던 김대중의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하지만, 전대협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90년대 학생운동 출신 중 제도 야당으로 영입된 인물이 많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친김대중 성향의 재야 인사들이 여당에 흡수되면서 잔류한 이들은 90년대 말에 이르러 김대중 정부와 크게 대립했다. 특히 90년대 학생운동은 이전 세대보다 민주당에 비판적이었는데, 이런 흐름에서 90년대 학생운동은 민주당연합 노선보다 진보세력의 독자 세력화를 선호하게 되면서 진보정당 운동의 확대·강화에 기여했다. 이런 변화에는 90년대 급진 운동의 '익숙한 좌절', 즉 현실의 승리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역사 투쟁을 중시하는 문화적 태도도 영향을 끼쳤다.

3) 세대 분석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 간 차이를 드러낼 뿐이지만, 최근에는 집단 간 상대적 차이를 집단의 절대적 특성으로 규정하는 과도한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91년 이후 대학에 들어온 70년대생을 의미하는 97세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586세대가 소수의 학생운동 경험을 과잉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고, MZ세대가 내적 이질성이 다른 그 어떤 세대보다 크다는 점에서 세대로의 특성을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전후 세대와 함께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97세대다. 주목받지 못한 97세대의 소외감은 91년 투쟁에 대한 망각의 의미와 상통한다.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1993년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권두영이 구치소에서 자살했고, 원진레이온 노동자였던 고정자가 자결했다. 광주교대생 이경동은 주한미군 철수와 김영삼 정권 반대를 외치며 분신했고, 전교조 해직 교사 길옥화도 노조 탈퇴 요구에 반발하며 자결했다. 광주교대생 한상용은 교육정상화를 외치며 분신했다. 이후 90년대만 해도 김성윤, 최성묵, 정행구, 최정환, 양봉수, 박삼훈, 서전근, 이덕인, 장현구, 조수원, 김시자, 신연숙, 노수석, 진철원, 권희정, 황혜인, 오영권, 박동학, 정인택, 이상희, 김말룡, 한상근, 민병일, 류재을, 홍장길, 박순덕, 김준배, 최대림, 이길상, 이상관, 윤창녕, 박용순이 스스로 죽음으로써 투쟁을 호소하거나, 의문사하거나, 공권력에 의해 숨졌다.

91년 5월을 기억하는 이들은 대부분 당시의 트라우마와 좌절을 이야기하며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5월 투쟁 정신의 계승을 말한다. 그러나 91년 5월은 그 시점에 멈춘 것이 아니었다. 단절이라기보다 분기였다. 떠난 자들 말고, 돌아선 자들 말고, 그것을 지켜나가려 했던 이들 역시 유사한 좌절과 트라우마를 겪으며 짙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힌 청년기를 보내야 했다.

계승, 좌절된 것들의 연대

91년 열사 투쟁은 운동의 가치가 단순한 논평이 아니라 무한한 헌신과 실천에 있다는 것을 희생으로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5월 투쟁의 3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그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려 하는가? 91년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좌절을 맛봐야 했던, 오지 않는 혁명의 꿈을 꾸었던 이들에게 어떤 실천과 행동을 제안하는가? 그 메시지의 구성 없이, 어떻게 5월 투쟁을, 그 정신을 계승하는가? 민주화운동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화 운동 유공자가 되면 그 정신이 계승되는가?

발표자들은 “다층적 적대를 민주주의의 역동적 에너지와 문제정의 및 해결의 계기로 전변시켜내기 위해”(정준희), 그리고 “사회경제적 구조의 불평등 및 부조리, 그리고 한반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적 요소에 대한 주체적 대응”(홍기빈)을 위해 21년의 시점에서 91년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앞으로의 과제처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91년 30주년을 기념하는 일련의 행사들이 모두 끝나고 나면, 과연 누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1년 5월을 다시 소환할까? 아마 40주년 행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안이 등장할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91년 5월 투쟁의 계승은 그날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에서 머무르기보다 5월 투쟁과 그 자식들 간의 잃어버린 연대를 복원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새로운 실천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일정과 행사가 끝나간다고 후회할 필요는 없다. 5월 투쟁이 91년 한해의 ‘사건’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듯, 그 자식들이 기념해야 할 다양한 30주년의 계기는 이제부터 매년 온다. 우리는 이제 91년 5월 투쟁이 이루려고 했던 것의 합리적 핵심을 취하고, 그 부정적 의미는 혁신함으로써, 고이 간직했던 진보의 가치를 대중과 함께 재구성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91년 5월이 바꾸고자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던 87년 체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평등적이며, 보다 자유롭고 자주적인 방향으로 바꾸자는 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될 것이다.

91년 이후 모든 좌절된 것들이 다시 같은 꿈을 만들기 위해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것이 91년 5월 투쟁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계승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91년과 대면하고 대화할 용기를 가지다

정완숙 | 1991년 전대협5기 투쟁국 차장

91년 투쟁과 다시 대면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내면서 꾀을 수 있는 어려운 과제 중 한가지임에 틀림없다. 토론 제안을 받았을 때 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쉬이 수락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기억이나 환기의 차원이 아니라 일종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91년과 미래와의 억지스럽지 않은 대화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무리한 기대가 용기를 내게 했다.

67년생인 나는 대통령은 박정희만 있는 줄 알았고, 그가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뉴스를 15리 걸어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교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길가 밖에서 일하시던 아저씨가 하늘이 무너진 표정으로 전해준 뉴스에, 그 아저씨 보다 더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같은 느낌과, 당장이라도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쩌나하는 공포와, 이 나라의 운명은 앞으로 어찌 될지 극심한 걱정과 대통령을 잃은 국민으로서의 상실감과 슬픔에 휩싸여 빠른 걸음으로 교실에 도착해서 책상에 얼굴을 묻고 영영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민학교 교실 전면에 대통령의 사진과 태극기사진을 보면서 애국심을 키우고, 국민교육현장을 달달 외우고, 반공 포스터, 반공 표어, 반공 웅변대회에서 솔찬히 상을 타면서 반공정신에 불탔던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시절 서울에서 갓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임하신 아주 도회적이고 예쁜 담임 선생님의 자취방에서 에이스에 커피를 찍어먹으며 은밀하게 들었던 5.18 광주항쟁 이야기 (당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특징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주셨으나 그 때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 노동운동이야기, 또 그 와중에 애뜻한 사랑이야기, 상록수가 만들어진 이야기와 함께 배우면서 눈물도 짓고, 신문 사설읽기 모임도 했지만 멋모르던 중학생시절을 거쳐, 청양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연합고사 ‘뽕뽕이’로 대전의 신설 학교에 배정되어 우는 친구들을 우리가 가서 역사를 새로 만들자 격려하면서 호기롭게

유학을 왔고, 여전히 친구들과 사설읽기 모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초기 전교조세대 선생님을 막연히 존경하고 지지하였으며, 당시 이화여대생들이 충남대에 무엇을 보냈다더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들으면서 한심해 하는 등 어설피게 사회의식에 눈을 뜨는 것 같기도 하였으나, 선도부 활동을 너무 모범적으로 하여 대입 시험을 본 3학년 선배들에게도 정해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여 끝까지 괴롭힌 옷프고 어설피른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선택한 나의 대학교시절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 모른다. 86년에 입학하여 87년의 정말 신나는 승리를 거리에서 맛보았고, 89년 하반기 감옥에 갔다 와서, 91,92년 전대협 투쟁국 활동을 하는 시기까지 누구나와 같이 시대적 역동성에 온 몸을 맡겨 혼신의 힘을 다했고, 실무역량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운동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은 아마도 90년도부터였고 운동의 좌절을 절감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본격적으로 창립하던 92,93년도 즈음으로 기억한다.

87년 이후 대선에 대한 민주화운동세력의 다른 전략과 결과를 마주할 때까지는 실무역량으로서의 정체성에 충실했으므로 방침에 묻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따르는 시기여서 책임감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91년을 겪으면서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미궁 속에서 헤맸고, 이후 선배(운동권리더십)에 대한 원망과 좌절로 한 때는 변화를 주체적 실력으로 수용과 적정 방향을 밝히지 못할 바에 새로운 운동에 걸림돌이라도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니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운동’이라고 고민을 했던 시기도 있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속에서 절실한 사회적 질문을 거듭하면서 나름의 활로를 찾은 것이 시민의 직접참여를 설계하여 ‘함미 없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촉진하는 타운홀미팅을 퍼실리테이션 하면서 나는 나름의 사회혁신운동의 진로를 찾았고, 그 신념으로 현장에서 에너지를 즉시 충전하는 사회변화촉진자로서의 길로 들어선 지 10여년이며,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세 분의 원고 덕분에 다양한 접근방식이 있음을 새삼 느꼈으며, 이준영 사무국장님의 글을 보면서도 전체적인 시선을 확보하기 위한 기록의 중요성과 함께 노고가 느껴졌다.

또한 아직 담담하게 온전히는 아니지만 91년을 절절히 회고하고 대면할 수 있었고, 문제의식에 통감하며 객관화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정준희 교수님의 언급처럼 91년과 21년과 마주하는 질문을 몇 가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우 거칠지만 개인의 생각정리와 질문에 앞서 운동의 흐름, 정치권력의 전략과 프레임의 변화 등에 대해 살펴본다.

87년 노동자 대투쟁부터 민주노총 출범까지 노동자 투쟁으로 이루어낸 민주노조 운동

한성규 | 민주노총 부위원장

- 2021년이 있기까지 변혁운동의 흐름 : 1894년 동학혁명부터,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노동자 대투쟁, 통일운동, 다양한 분야별 시민운동의 탄생, 풀뿌리시민운동으로의 확산, 촛불...
- 시대별 민주주의 과제와 변화 흐름 : 군부독재의 극복, 민주주의 제도화, 다양한 민주주의 확장과 심층민주주의 실현, 분권과 자치의 시대로
- 권력의 형태와 행사 : 군부독재, 민간독재, 언론독재 추구하면서 시대와 경우에 따라 물리적 상징적 폭력의 동원과 다양한 전략구사
- 사회변화세력의 변화와 대응 : 전민련, 전대협 부문이슈가 아닌 전체이슈를 다루고 관리할 조직이 존재하던 시기와 그렇지 않은 시기
- 학생운동세대의 고뇌 : 전대협, 한총련 등 (당연한) 조직범위에서 활동을 하던 시기와 사회진출시기 이후 (당연한 사회조직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대부분 생활인이 되어 개인이 몸담을 곳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시기의 고뇌
- 현재의 운동방식과 과제 : 풀뿌리 시민운동의 활성화, 자치와 분권의 제도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제도화, 시민직접참여 역량 강화의 시기, 정부 지자체로부터의 자율성 강화 및 거버넌스 환경 만들기
- 시대를 관통하는 과제 : 우리사회의 철학의 빈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91년 21년과의 대화를 위한 질문

- 당시의 리더십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부담과 고뇌가 전해진다. 당시 민족민주운동 리더십의 전략부재의 원인은 무엇인가.
- 현재는 사회변화전략이 충분히 전략적인가. 전략적이지 못하다면 91년과 닮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전략을 세웠어야 하는가. 그 전략이 주효했다면 오늘날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 사회의 변화와 운동과정에 대중운동과 정치운동의 혼재 또는 역할의 분화는 겪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대중운동 세력이 대내외 상황을 진단하고 변화를 예측한 자기 주도적 전략구상과 실행 설계를 못한 측면은 여전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집단 문화적) 리더십 형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 연결된 질문으로 역사 속에서 민간의 (일정시기) 지속가능했고 빛났던 리더십은
- 투쟁 성과의 수렴은?
- 이후 91년과의 대화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1987년 6월29일,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항쟁에 대한 항복선언을 발표하자 독재정권 타도를 외치며 거리를 휩쓸던 민주화 투쟁이 진군을 멈추었고, 전국을 뒤덮었던 최루탄 가스도 가라앉았다. 한편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억압과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투쟁의 거대한 물결이 쓰나미처럼 일어났다.

이것을 증명하듯 1987년 6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총 3,235건의 파업을 벌였고, 이 시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122만 5천여명에 이르렀습니다. 신규노조는 7월 한달만 126개에 이르렀으며 연말까지 1,361개의 노조에 22만명의 조합원이 새로 등록되었다.

노동자들은 독재정권과 총자본의 억압에 대응하고 노동법 개정과 같이 전체 노동자 공통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중앙조직이 필요함을 절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88년 8월 '전국노동법개정투쟁본부'를 결성하고 11월13일에는 연세대에서 '전태일 정신 계승 및 노동악법 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중적 시위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민주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노태우에게 상납하였고 야권의 분열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은 1989년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자 투쟁 역시 1,616건의 노동쟁의가 말해주듯 거세게 전개되었다.

128일에 걸친 현대중공업 골리앗 파업투쟁과 서울지하철 노조가 '합의각서' 이행을 요구하며 진행한

전면파업, 전국교직원노조 결성 투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노조진영은 이러한 힘을 집결시켜 투쟁하기 위해 1990년 1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출범시켰다. 같은 날 노태우-김영삼-김종필은 3당 합당 선언을 통해 민자당 통합을 만들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태세를 분명히 했다. 경찰의 봉쇄망을 피해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노협 결성대회에는 8백여명의 대의원을 포함한 1천5백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노태우 정권은 전노협을 “계급투쟁과 폭력혁명 노선을 추구하는 불법집단”으로 규정하고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탈퇴 강요를 비롯하여 ‘제3자 개입 금지조항’을 이용한 전노협 지도부에 대한 구속·수배 등의 강압 조치, 파업사업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노협을 와해하고자 하였다.

전노협에 가입하지 않은 비제조업 노조들의 조직도 계속해서 확산, 결성되었다.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결성, 1990년 4월 KBS 방송민주화투쟁과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적극 대항하면서 1990년 5월 30일 ‘업종노동조합연맹회의’(업종회의)를 출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업종회의의 구성 조직 가운데 사무금융, 언론, 병원, 건설, 전문·대학노련과 전국강사노조 등 7개 연맹(노조)이 합법성 확보하였다. 이는 투쟁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여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부산에서는 한진중공업, 대우정밀(현 S&T대우) 등이 참가하는 ‘부산노동조합 총연합(의장 이성도)’이 출범했다. 대우조선노조는 결사대 51명이 108m 높이 골리앗에서, 6천여 명 조합원은 땅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천지작전’으로 2월 8일부터 2월 13일까지 결사투쟁을 전개하여 요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을 제지하기 위해 노태우정권은 부산노련 와해를 목적으로 한진중공업, 대우정밀, 고려 부산노조 등을 표적으로 경찰뿐 아니라 안기부까지 동원하여 전노협 탈퇴공작에 혈안이 돼 있었다.

91년 투쟁을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강경대 학생의 죽음을 시작으로 노태우정권 타도를 외치며 노동자, 학생들의 목숨을 던지는 저항으로 말할 수 있다.

◇ 1991년 4월

- ▲ 4.26 강경대 명지대 학생 총학생회장 석방 요구 시위 중 경찰 진압에 의해 사망
- ▲ 4.27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결성
- ▲ 4.29 박승희 전남대 학생 강경대 사건 규탄집회 중 분신

◇ 1991년 5월

- ▲ 5.1 김영균 안동대 학생 분신
- ▲ 5.3 천세용 경원대 학생 분신
- ▲ 5.4 백골단 해체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회, 전국 20만 명 참여
- ▲ 5.6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의문사
- ▲ 5.8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분신
- ▲ 5.10 윤용하 노동자 분신
- ▲ 5.13 전대협 소속 대학생 46명 민자당 중앙당사 점거, 전원 연행
- ▲ 5.18 연세대 정문 철교에서 이정순 분신, 김철수 보성고 학생 분신
- ▲ 5.22 정상순 노동자 분신, 노재봉 국무총리 사퇴
- ▲ 5.25 김귀정 성균관대 학생 경찰 강경 진압으로 사망
- ▲ 5.28 노태우 대통령 민심수습대책 발표

◇ 1991년 6월

- ▲ 6.1 전대협 5기 출범(부산대)
- ▲ 6.2 노태우 정권 퇴진 제4차 국민대회
- ▲ 6.8 이진희 노동자 분신, 노태우 정권 퇴진 제5차 국민대회
- ▲ 6.12 김귀정 열사 장례식
- ▲ 6.15 석광수 노동자 분신
- ▲ 6.29 6.29 선언 파산선고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제 6차 국민대회, 박창수 열사 전국노동자 장례식, 국민회의 명동성당 투쟁 해제

이 속에서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은 수감 중이던 안양교도소에서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5월 6일 사망한 채로 병원 마당에서 발견됐다. 열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5월 7일, 노태우정권의 폭력경찰 백골단은 열사가 안치돼 있는 안양병원 영안실 벽을 뚫고 진입하여 열사의 시신을 탈취해갔다.

이에 5월 9일에는 전국 98개 노조 4만여 명이 ‘박창수 위원장의 살인진상 규명과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총파업을 단행하고 치열한 가투를 전개하였다.

이런 가운데 전노협, 업종회의는 1991년 10월9일 ‘ILO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 공대위)를 결성하였다. ILO 공대위는 전국 9개 지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노동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국회 청원 등의 활동을 했다. 그리고 1991년 11월10일에는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태일 정신 계승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다.

1991년에는 소위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제2공안 통치 속에서 '수서 비리 은폐정권 규탄 국민대회', '세계노동절 102주년 기념대회', '강경대 폭행치사 규탄투쟁'을 비롯, '박창수 위원장 옥중 살인 규탄 및 원진 레이온 직업병 살인규탄 대회'등 대규모 투쟁이 있었다.

노조 조직률은 1989년을 고비로 매년 낮아지고 파업투쟁의 성과도 전과 같지 않았다. 민주노조진영은 전체 운동진영을 포괄하고 노동운동의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사업추진체'로서 '전국노동조합대표자 회의'(전노대)를 1993년 6월1일 정식 발족시키게 됐다.

1993년 등장한 김영삼 정부는 국제화, 세계화를 명분으로 하는 통제정책으로 대응했다.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전노대 소속 노조간부들을 구속·수배하는가 하면, 노동쟁의 사업장에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노동법 개정 무기한 연기' 방침을 천명했다.

전노대는 1994년 11월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를 공식 발족시켰다. 민노준은 "투쟁 속에 민주노총을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1995년부터 임단협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과 함께 사회개혁 투쟁에 힘을 쏟았다.

마침내 1995년 11월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연세대 대강당에서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사적인 창립대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의 출범에는 15개 산업(업종)조직과 10개 지역본부, 2개 그룹조직이 가맹했고 단위노조는 861개 조합원은 418,154명이었다.

※ 인용 및 참고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한국노동운동사 [8] - 한국 노동자계급, 역사의 전면에 도약하다'

파르마콘으로서 91년 열사투쟁 : 프롤레타리아화와 탈정립화

박성우 | 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어떤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연결망의 환호성이 자리하는 것일 뿐이다.'

- Latour, 1988

우리가 사실이나 실재라 부르는 사회적 사건은 인간, 사물, 제도, 환경 요소가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이룬 일시적 집합체^{collective}일 뿐이라는 주장(Latour 1988)이 있다. 이렇게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이 연합한 네트워크가 세상을 번역하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점점 더 많은 행위자의 자발적 결합, 모방과 적용(Tarde 1903)이 이어져 동맹의 강도가 급격히 강해지고 이를 우리는 사회적 실재 혹은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호명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많은 수의 힘센 행위자, 참여자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네트워크일수록 그 내부가 더 정교하고, 복잡하거나, 혹은 발전된 형태일 것이라는 기대는 단지 기대일 뿐인 경우가 많고, 오히려 훨씬 덜 정교하거나 단순하고 조잡한, 때론 낙후되고 뒤떨어진 연결망인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 투쟁에서 승리의 역사라 불리는 87투쟁과 실패와 아픔, 상처의 역사라는 91투쟁은 어떠할까? 독약과 해독제의 동시성, 이중성을 의미하며 이 둘 사이의 공생적이며 변증법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파르마콘^{Pharmacon}(Stiegler 2011)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91년 봄은 다분히 차별적이고 또 생산적일 수 있겠다.¹⁾

1)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방법 가운데엔 오랜 시간을 두고 비교적 공고히 자리하는 네트워크(동맹)에서 점차 사라지는 행위자는 누구이며 강화되거나 또 새로이 진입하는 행위자는 무엇인지를 그 변화의 추이를 통해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 보는 것이 있다(Latour 1988).

91년 열사투쟁 국면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시선은 이 시기에서부터 더욱 두드러진 ‘프롤레타리아화(빈곤화) 체제/시스템/네트워크/동맹’이다. 프롤레타리아화는 자본주의체제에서 가장 강력하고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자 질서로 특히 19세기 이후 기계, 대중매체 뿐 아니라 자본 등 다양한 지배 권력과 국가의 공모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91년 열사투쟁 정국 역시 이 체제에서의 주요 변곡점으로 자리했다고 할 수 있다. 살펴볼 당시의 빈곤화 네트워크에서 핵심은 바로 다수의 민중들 그리고 이들이 구체화하였던 힘과 투쟁 그리고 연대에 대한 기억, 경험의 강탈이자 이러한 에너지에 대한 소진이다.

잊혀져간 행위자, 끝까지 투쟁한 청년학생, 노동자, 민중들과 그 역량

91년 정국에서 잊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주체들은 너무도 당연히, 목숨을 바쳐 투쟁한 우리들의 벗이자 동지, 스승이었던 많은 열사들이다. 더불어 또 다른 핵심 행위자는 마지막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 일어났던 민중, 청년학생, 노동자들이며 이 국면과 함께 그동안 잊히고 배제됐던 것이 바로 이 시기 축적된 이들의 경험과 힘이다. 노동자, 민중, 청년학생들이 마주했던 생생한 지식, 기술, 경험, 곧 공감과 소통, 유대의 능력은 엄혹한 자본주의 지배 체제에서 역사의 퇴행을 예방할 수 있는 원동력일 뿐 아니라 피치 못할 사회 질서의 혼돈 국면에서도 그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버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총체적 역량과 에너지를 존중하고 충분히 반영해 동원할 수 있는 사회와 시스템이 진보와 개혁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30년 전인 1991년의 투쟁 국면에서의 이들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힘 역시 분명 우리 사회, 문화와 역사 어디론가 이르렀고 그 영향과 성과는 비록 서로 통일되지 못하고, 해체적이었다 하더라도, 분명 도도하게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새내기였던 필자의 당시 기억에서도, 91년 투쟁 국면은 이전처럼 반민주,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와 같은 단일한 전선과 구호, 대오가 전제적으로 지배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대의에 대한 동의를 넘어서면 세부적으로 다소 분절적이었지만 대신, 다양한 지향과 흐름, 에너지가 합산하여 분출한 마치, 거대한 연대와 동맹의 투쟁 물결과 같았다. 실제, 1991년은 연 초부터 수서지구 택지비리와 자본,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시작하여 노동탄압에 저항한 한진중공업 노조와 박창수열사, 전국 대학들에서의 학원자주화투쟁과 강경대열사, 충격적이었던 3당 합당과 보수 야합을 규탄하며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염원했던 김귀정열사 등 다양한 분노의 흐름과 결, 층들이 맞부딪히고 더해지고 또 강해지거나 흩어지던 시기였다. 그러나 그 해 벽두부터 초여름까지 지속되었던 상당히 긴 투쟁의 기간 동안, 사실상의 단일한 투쟁지도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통일된 지침이나 행동 역시 큰 영향력이나 존재감을 가지지 않았다.²⁾ 87년 투쟁의

여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차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91년 열사투쟁 당시 축적되었던, 이전과는 분명 달랐던 주체들과 이들의 지식, 기술, 경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유대의 능력은 단순하고 정략적으로 일반화되어 실패의 기억과 대상에 포함되어서도 혹은 폄하되거나 잊혀서도 안 될 것이다.

두드러진 행위자, 前 91 세대와 총체적 빈곤화

전술했듯, 지난 30년 간, 우리 사회의 총체적, 사회적 역량은 빈곤화 체제의 강력한 원심력에서 쉽게 빠져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주변에서 담론과 담론투쟁이 거의 사라졌고 사회 전반에서 ‘상징의 빈곤(symbolic misery, stiegler, 2011)’을 한탄한다. 이제 시대적 사유와 논쟁의 대상인 사회적 담론투쟁의 영역은 미디어, 대중매체에 기반 한 기억투쟁과 가짜뉴스 시대 지식투쟁으로 급속히 대체되었다. 더불어 디지털과 기술적^{technic} 기억에 기반 한 단기 기억은 장기 기억을 꾸준히 억압하면서, 사회적 꿈과 상상력마저 빠르게 소진되어 갔다. 급기야 진보와 보수진영(자유주의 좌, 우파 진영) 모두에서 도덕적 계몽주의에 입각한 집단적 신반동주의^{neo-reactionism}가 득세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적 측면에서의 근원적 욕망과 리비도 경제의 파괴로까지 이어지게 한 주요 계기들이다.

91년 열사투쟁 정국에서 마주했던 사회적 인식과 태도, 경향성 역시 갈수록 빈곤화, 탈맥락화되어 그 간 방치되었다. 정작 91년 열사들이 가졌던 꿈과 희망, 이상은 잘 기억되지도,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는 대신, 당시 투쟁에 대한 분절적 회상과 단기적 기억은 87년의 여진이라는 방향성에서 더 많이 소개되곤 한다. 또한 91년 당시에도 이미 오래되고 새롭지 않았던 전대협 등 여러 단체의 지도부들 대부분은 언제나 자신들의 시대와 91년 이후를 구별지며 ‘투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유일한 주체이자 세대’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며 민중들의 새로운 사회적 상상력을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과거의 정보를 통해 현재를 통제하는 의미인 억제^{containment}와 달리 미래의 부재에 대한 기대 속에 현재를 가상적으로 통제하려는 선제(Massumi, 2007)의 개념은 강력한 효과를 위한 작전의 논리 기제이자 핵심으로써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전 91세대의 정치적 세력화에 오랫동안 일조하였다.³⁾ 오랫동안, 포스트 91시대의 다수 청년들이 가

2) 구체적으로, 당시 김귀정열사 추모투쟁을 전개하던 성균관대 학생들의 경우, 전대협 산하 많은 대학 에서 참여했던 당시 5기 전대협 출범식(부산대) 참가조차 거부한 채 몇 주에 걸쳐,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투쟁(지하를 거점으로 서울을 장악하는 방식으로)을 시민들과 연대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3) 마수미는 선제의 작동에 대하여, 그 자체를 조직화하기 위한 실제 원인은 존재하지 않고 잠재성만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실제 원인의 부재가 이를 대신할 결과 효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놀라운 사건(이벤트)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부재하는 가상의 원인이 오히려 실제적이며 직접적으로 ‘실재-효과-산출’을 전환해낸다는 것이다(Parisi, 2013: 23).

지게 된 영원한 트라우마, 자책감, 상실감은 이전 세대, 즉 386/586과 그 시절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꿈, 야망, 상상력으로 교환되어 선제적으로 이들의 정치사회문화적 자산으로 치환된 것이다. 결국 정작 이들에 의해 이끌어진 것은 사회적 꿈과 상상력의 비자발적 교환의 댓가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영속적인 자본주의 주류 질서일 뿐이었다.

1991년 폭력비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오래전 벤야민(Benjamin, 1991)이 이야기한 법과 폭력 사이의 상호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공생적인 관계를 참조하여 91년 투쟁국면에서의 폭력들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른바 '일부 극렬좌경학생들의 비윤리적 불법폭력사태'라는 당시 익숙했던 프레임은 91년 봄 이후 더욱 본격화하여 학생운동세력이 거의 퇴조한 96년~97년까지 그 위세를 더하게 된다. 벤야민의 주장처럼 폭력 비판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그러한 폭력이 법, 정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가 이야기 한 범보존적 폭력, 법제정적 폭력 그리고 순수폭력이라는 폭력의 여러 층위들에서 그동안 우리 현대사의 여러 변곡점들에서 주로 마주했던 폭력은 범보존적 폭력과 법제정적 폭력 사이의 전면적 충돌이었다. 그러나 서로 공생적이며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는 이 두 가지 폭력 즉 신화적, 법적 폭력은 각각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순수 폭력은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며 이러한 '순수하고', '신적'이며 '혁명적인' 폭력의 본질적 특징은 법을 지키거나 만들어내지 않으며 오히려 법을 탈정립시켜 새로운 역사 시대를 연다는 것이 오래된 벤야민의 테제이다. 구체적으로, 87년 투쟁이 신화적, 법적 폭력의 전면적 충돌이었다면 91년 열사투쟁 국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와 한계를 넘어선 그 이상의 모습까지 함께하고 있다. 벤야민이 '분노'를 순수한 폭력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 91년 열사투쟁은 노동자 민중 학생들의 순수한 분노를 그 토대로 하고 있었고(80년 광주처럼), 그래서 그 목적과 대상에서 법, 질서 통치와 집행에 대한 부분은 분명 넘어서 있었다. 그 매개체는 열사투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다시 살아오는 생명이며 불꽃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실 사회 속 법과 정의에 대한 모순을 통찰하며 그 활력을 빼앗고 그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법과 정의 자체에 대한 절망의 공간으로 좌절, 분노를 초래할 정도의 감정 상실이 근본적으로 자리하던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 이처럼 누군가에 의하여 비록 승리하지 못한, 실패한 투쟁의 역사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당시 투쟁 주체들의 폭력에 대한 판단은 폭력과 법, 정의 사이의 허울 좋은 관계를 폭로함으로써, 통치하거나 집행하는 폭력이 아

4) 김귀정열사 투쟁 당시의 가장 큰 목소리는 다음 아난, "귀정이를 살려내라.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였다.

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순수하게 작동하고 현현하는 폭력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 계기로 작동했다는 것이라 하겠다. 결국 법이란 정의가 아니라 단지 정의로 이끄는 문일 뿐이며 정의에 이르는 길을 여는 것은 법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부당한 법률-의-힘 자체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91년 열사투쟁에서 목도했던 주체의 폭력은 이 후 30년간의 우리 역사에서 촛불이라는 삶의 형태로 결코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반드시 다시 다뤄지고 추적해야 할 연구의 대상이다.

나가며

사회 진보와 관련하여, 이미 100여 년 전 레닌이 시간으로의 혁명을 이야기했고 10여 년 전, 전 지구적이었던 점령하라 운동이 공간으로의 혁명을 보여 주었다면, 우리의 91년 열사투쟁은 적어도 80년 광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있던 모순에 대한 저항의 역사들을 관통하여, 2000년대 이후 현재에까지 지속적으로 되살아나는 촛불의 놀라운 역사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곧 부정적·반응적 *reactionary* 현상을 넘어, 바로 이러한 고유한 분위기, 환경으로서의 혁명, 즉 생명으로서의 정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오래된 자본의 신화, 그리고 현 시기 자동주의 신화(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신화)의 한계에만 머물러 있는 (신)반동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넘어 우리만이 가지는 고유한 방식의, 즉 삶의 형태들로서의 긍정적·생산적 투쟁의 도도한 흐름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꾸는 꿈, 특히 정치사회와 사회구성체에 대한 꿈들은 얼마나 차별적이고 특이한 것들인 물어 보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역시 당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시금 이러한 꿈들을 소환하는 것, 즉 이러한 정치의 역할을 시급히 재가동하는 일일 것이다. 스티글러(2016)의 경우엔 이러한 꿈의 실현에 대해 부엔트로피적/탈엔트로피적 잠재성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시대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즐겨한다. 하늘을 나는, 마치 공상과 같았던 다빈치의 꿈이 몇 백 년을 건너뛰어 19세기에 비로소/갑자기 이뤄진 것처럼 우리에게 부엔트로피를 추동하며 꿈꾸는 일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시급히 소환해야 할 정치적 작업인 것이다. 결국 91년을 복원하는 것은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다시 꿈을 꾸는 것을 시작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으로, 특이함으로 무장한, 완전히 비개연적인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파지(기억/기록)의 생산을 위해 기존의 파지(기억/기록) 사이에 새로운 파열과 배열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왜냐면 2021년 우리는 여전히 불꽃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상적으로 연결된 사회성은 아직도 실현되기 어려우며, 전통적인 민주주의의 공간들은 오히려 사라지고 있

기 때문이다. 지난 30년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치는 정말 나아졌는가?

참고문헌

Benjamin, W. (1991). *Illuminations*. London: Fontana Press.

Latour, B. (1988).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Massumi, B. (2007). Potential politics and the primacy of preemption. *Theory & Event*, 10(2).

Parisi, L. (2013). *Contagious Architecture: Computation, Aesthetics, and Space*. Cambridge, MA: MIT Press.

Stiegler, B. (2011) *Technics and Time 3*, Translated by Barker, 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Stiegler, B. (2016). *Automatic Society: The Future of Work* (D. Ross Trans.). London: Polity. (Original work published 2015)

Tarde, G. (1903) *The Laws of Imitation*, London: General Books.

청소년운동 입장에서 본 1991년

난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1991년 투쟁 속 고등학생운동

몇 년 전 광주 5.18 묘역에 있는 김철수 열사의 묘를 방문한 적이 있다. 김철수 열사 묘비 옆면에는 “우리 나라 모든 고등학교가 인간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 유서 申”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30년 전 열사의 외침이었지만 바로 지금 청소년인권활동가의 말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나는 그 묘비를 마주하고 비로소 김철수 열사를 오래전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고 투쟁했던 청소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김철수 열사는 1990년 죽은 김수경, 심광보 열사와 함께 고등학생운동¹⁾의 열사로 꼽힌다. 특히 김철수 열사는 1991년, 강경대 열사가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투쟁의 와중 분신한 이들 중 1명이다. 전남 보성고 학생이었던 김철수 열사는 1991년 유일한 ‘고등학생 열사’이다. 그런데 죽음 당시에 고등학생은 아니었으나 고등학생운동 출신의 열사들은 더 있다. 1991년 투쟁 초기 대학생 열사인 전남대 박승희(4월 29일 분신), 안동대 김영균(5월 1일 분신), 경원대 천세용(5월 3일 분신) 열사 모두 고등학생운동 경험자인 것이다. 이는 당시 분신으로 항거했던 학생 열사 전원이 고등학생운동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강경대의 죽음에 이어 이들의 죽음이 1991년 5월 투쟁을 격화시켰으며 이는 김기철, 윤용하,

1) 여기서 ‘고등학생운동’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 무렵까지 존재한 중·고등학생 또는 그 연령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된 변혁운동을 말한다. 이 명칭은 당시 운동 주체들이 ‘대학생운동’과 구분하여 문건 등에서 ‘고등학생운동’이라 자칭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정순 등 다른 노동자, 활동가 들의 분신 항거로 이어졌다.²⁾

고등학생운동은 1987년을 전후하여 조직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운동이다. 1988~1989년 “대통령부터 반장까지 직선제로”를 외치며 여러 중교에서 학생회장 직선제, 자주적 학생회 투쟁으로 학생 자치권을 쟁취했다. 1989년 전교조 창립과 해직 사태를 맞이하여선 더욱 대중적인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졌다. 이후에는 참교육으로 대변된 교육 개혁 요구의 목소리로, 두발규제 철폐 투쟁, 보충수업 철폐 투쟁 등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화를 위한 투쟁, 그리고 반미·통일이나 노동해방 등 사회 변혁을 위한 각 노선별 활동으로 고등학생운동은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91년 투쟁 당시에는 고등학생운동 조직들이 조직적으로 대오를 꾸려 참여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정치활동 쟁취 공동실천위원회’는 18세 선거권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철수 열사의 죽음 이후 광주에서 고등학생들이 결의대회를 열고 ‘참교육선봉대’ 깃발을 들고 나선 모습은, 고등학생운동이 하나의 운동 세력으로 조직화되어 1991년 투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드러낸 장면이기도 했다.

비록 고등학생운동이 1991년 투쟁에서 수적으로 주를 이룬 것은 아니었더라도, 고등학생운동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 세대와 그들의 문제의식은 당시 투쟁을 좌우했다. 가령 외대에서 학생들이 정원식 총리 임명자에게 계란과 밀가루와 오물 등을 던지며 항의한 사건은 전교조 해직 반대 투쟁과 떼어놓고 볼 수 없다.

고등학생운동의 경험, 또는 공통된 세대의 경험은 1991년 5월 투쟁의 국면이 결정적으로 전환되는 6·3 외대 사태에서도 드러난다. 1989년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의 해직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문교부 장관이던 정원식에 대한 외대 학생들의 항의와 계란, 밀가루 투척은 총학생회 지도부와는 관련이 없는 외대생들의 자발적인 ‘응징’이었다. 1989년 연인원 50만 명에 달하는 고등학생들의 시위가 있었고 그러한 경험은 개인의 뇌리에 깊숙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 양돌규(2002), 앞의 글

이처럼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확대, 심화된 고등학생운동의 경험과 문제의식은 1991년의 대중 투쟁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991년 5월 투쟁의 배경 중 하나로 전교조를 꼽는 해석³⁾ 역시 실제로는 고등학생운동의 경험과 존재가 끼친 영향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

2) 양돌규(2002), <1991년 5월 투쟁에 대한 세대론적 접근 - 그 세대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자율평론》 3호. 양돌규는 이들이 고등학생으로서 1987년 이후 많은 열사들의 죽음을 목도했음을, 특히 바로 이전 해 1990년 김수경과 심광보의 죽음을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세대’의 죽음으로 여겼음을 이야기한다.

3) <잊힌 투쟁은 실패한 투쟁인가? - [단비현장] 경기도 이전 민주화운동기념공원>, 《단비뉴스》, 2021년 6월 12일.

고 고등학생운동이 밑바탕에 있었다는 바로 그 부분이 1991년 투쟁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다. 고등학생운동의 경험도,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서 내세운 이야기도, 교육과 사회에 대한 강렬한 문제의식과 변혁에 대한 열망도 모두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승인받지도 존중받지도 못할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멈춘 지점

홍기빈은 발제문을 통해 “87년의 민주화운동은 91년 5월에 그렇게 끝이 났다.”라고 선고한다.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지도부의 변절과 무능력’, ‘제도 정치로의 흡수로 귀결된 것’을 지목한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1991년 투쟁이 애초부터 운동 지도부의 의도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세영은 《한겨레》 칼럼에서 1991년의 죽음 중 몇몇을 제외하면 “애도의 밀도는 성기고 지속기간도 짧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그 결행 주체 상당수가 하층노동자, 고교생, 무직자 등 사회적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죽음을 또 다른 마이너리티의 죽음이 상쇄했고, 그 위에 가공된 음모와 부주의한 의심이 신속하게 덧칠됐다.”⁴⁾라고 지적했다. 바꿔 말해, 분신을 감행했던 주체를 포함하여 1991년 투쟁을 추동한 힘이 상당 부분 ‘사회적 마이너리티’에게서 나왔고 이들의 열망과 태도는 당시 투쟁 지도부와는 괴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앞서 거론한 고등학생운동의 영향은 그러한 ‘차이’의 일부인 것이다.

그리고 1991년 투쟁의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 1987년의 민주주의가 멈춘 지점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즉,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 실질적 ‘민주’는 전혀 도래하지 않은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아서라도 변화를 만들려 한 것이 열사들이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표적으로 체감하는 문제가 바로 학교 교육이었다. 1987년, 1989년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참교육을 이야기하고 실천하는 전교조 교사들을 내쫓는 학교, 전혀 변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현실이야말로, 김철수가 “이런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을래?”라고 외치며 분신하고 ‘학생들을 로보트로 만드는 교육을 왜 받아야 합니까?’라는 유언을 남기고 목숨을 잃게 만든 ‘배후’였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서 예외 취급받는 초·중·고 학생, 청소년들의 ‘정치적’ 삶도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아니, 민주주의의 바깥에 배제당하고 유예당할 것을 강제당하고 있었다. 당시 많은 고등학생

4) 이세영, <[아침햇살] 1991, 마이너리티의 죽음과 ‘승리 서사’>, 《한겨레》, 2021년 4월 14일.

운동 주체들이 활동을 이유로 학교와 가정과 국가로부터 전면적이고 가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었다. 1990년 학교 교사로부터 폭행과 언어폭력 등을 당한 뒤 투신한 김수경 열사의 사례는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이 겪었던 고초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91년 투쟁 무렵에도 교육청에서 ‘고교생 정신교육 강화 계획’이란 공문을 학교로 보내 학생들의 의식화를 막고 집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일이 버젓이 벌어졌다. 청소년들은 그 정치적 주체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 운동을 하는 청소년은 불온한 사상에 세뇌당하고 선동, 조종당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는 등 청소년 전반은 통제와 교육의 대상으로 위치 지워졌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시선은 1991년 투쟁에서 고등학생운동과 청소년의 존재가 지워지는 데도 일조했다. 운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교조나 대학생에 의해 의식화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운동 세력 안에서도 탄압을 피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순수성을 강조하거나 조직적 고등학생운동을 가시화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⁵⁾ 게다가 1991년 투쟁 이후로 ‘어둠의 세력’, ‘유서 대필’ 운운하며 죽음을 선동하고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식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런 식의 공격은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존재인 청소년들, 고등학생운동에는 더욱 치명적이었다.

정준희는 발제문에서 “처절한 저항적 행위였던 분신은 철없는 자기 파괴를 넘어 도구화된 죽음으로, 그리고 부당한 권력자에 대한 항의는 스승마저도 무자비하게 잡도리하는 무절제한 맹동으로 전치⁶⁾되었다.”라고 논하며, 언론의 상징 권력 행사가 ‘스승을 폭행하는 제자’라는 이미지로 완성되었다고 본다. 한데 이런 상징 권력이 대중에게 충분히 먹혔던 것은, 그만큼 학교 교육과 나이주의 문화라는 영역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채 남아있던 시대상을 드러낸다. 정원식 총리 임명자가 문교부 장관으로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총리 임명자에게 항의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적 원리도, ‘나이 많은 노교수가 어린 학생들에게 굴욕을 당하는’ 장면에 압도당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등, 해방의 정신보다도 나이주의와 권위주의, 군사부일체 등의 담론이 더욱 지배적이었기에 변혁운동의 주체인 학생들은 ‘패륜’으로 낙인찍혔다. 결국 1991년 투쟁은 1987년 민주화가 더 나아가지 못한 지점에서 시작되었고,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자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위축되고 잊혔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그리고 1987년에 대한 반성

김철수 열사의 묘역 앞에서 열사의 이야기를 듣고 비문을 읽으며, 왜 이런 열사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무지를 반성할 일이기도 하나,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1991년은 잘 조명받지 못했던 듯하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가 1991년의 투쟁을 어떻게 평가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 크다. 한편으로는 평가하고 기억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외면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도 던지고 싶다.

1991년 투쟁 속의 고등학생운동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긴 했지만, 1991년에서 고등학생운동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열망과 운동의 흔적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노조를 강경하게 탄압하던 공안정국과 경찰폭력, 물가 폭등이나 페놀 사건 등으로 인한 삶에 대한 위협, 그런 와중에 일어난 3당합당과 정치적 보수 반동 등은 이른바 ‘87년 체제’의 불철저한 민주화를 체감케 하고 있었다. 1991년 투쟁이 제기한 것은 어떤 문제였는지, 왜 당대에 승리하지 못했는지 살피는 것은 1987년과 ‘민주화’로 규정되는 역사/사회 인식을 반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민주화’라는 이념이 한계에 봉착하고 의문에 처하고 있는 지금 1991년을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홍기빈의 의견에 심분 동의한다.

그러한 재해석의 출발점은 바로 1991년 투쟁 속에서 어떤 주체들,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를 읽어내는 일이다. 가령 민주화되지 않는 학교 속에서 고등학생운동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참교육을 외쳤는지, 정원식 총리 임명자에게 야유하고 항의한 학생들은 왜 그럴 만하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는 왜 그러한 주체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직면해야 한다. 과연 학교 교육은 그로부터 얼마나 변화했는지, 청소년들은 정치적 주체로 존중받고 있는지, 나이주의와 권위주의는 사라졌는지, 일터와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렸다 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김철수 열사가 외친 ‘로봇트 교육’에 대한 거부, 인간적인 교육과 사회를 바랐던 외침은 단지 ‘민주화’라는 제목하에 요약될 수 없다. 30년이 지난 오늘날, 1991년은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 누가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지,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존재가 지워지는지를 물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5) 전누리(2019), <참교육을 넘어 고등학생운동을 기억하기 - 고등학생운동 열사와 기억의 정치>, 《오늘의 교육》 51호.

